

교과서 왜곡문제에 관한 국민 대토론회

- 일시 : 2006. 1. 18(수) 14시 ~ 16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 주최 : (재)여의도연구소

교과서 왜곡문제에 관한 국민 대토론회

■ 진행순서

- 오후 2:00 ~ 2:15 : 등록 및 개회
 - 등 록
 - 국민의례 및 내외귀빈 소개
 - 인 사 말 : 김기춘(여의도연구소 소장/국회의원)
 - 격 려 사 : 박근혜(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 격 려 사 : 이재오(한나라당 원내대표)

- 오후 2:00 ~ 3:45 : 주제발표 및 토론
 - 사회 : 최경환(여의도연구소 부소장/국회의원)
 - 발표 : 박효종(서울대 교수)
정재학(전남 삼호서중학교 교사)
이명희(공주대 교수)
 - 토론 : 서태열(고려대 교수)
최미숙(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서울대표)
문경호(대전외고 교사)
정영순(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 오후 3:45 ~ 4:00 :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 오후 4:00 : 폐회

인사말

김기춘(여의도연구소 소장/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여의도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 김기춘입니다.

저희 한나라당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사학법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는 이 때 여의도 연구소가 주최하여 「교과서 왜곡문제에 관한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발표를 맡아주신 박효중, 이명희 교수님, 정재학 선생님, 그리고 토론해 주실 최미숙 대표님, 서태열, 정영순 교수님, 문경호 선생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자리해 주신 박근혜 대표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토론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교과서는 우리 아들, 딸들이 지적인 능력을 계발하고 인격을 함양하기 위해 학교에서 사용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과서는 학계의 전문 연구자들에 의해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들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교과서는 우리 학부모들과 일반 교사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편향된 인식에 기초해서 많은 역사적 사실들을 왜곡시켜 기술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인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스스로 폄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차 초·중·고 경제교과서에서 4백여 곳 이상 잘못 서술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 그간 교과서 포럼을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교과서 왜곡에 관한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해오고 있어 실태가 조금씩 벗겨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한나라당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나아가 왜곡 실태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초·중등 교과서 왜곡 문제는 우리 국가의 자유민주주의 정체성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미래를 향한 우리 민족의 자신감과도 결부되어 있는 만큼 우리 연구소에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하시고 토론하시는 여러분의 귀중한 의견과 참석하신 국민 여러분들의 고견을 잘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교과서 왜곡문제에 관한 국민 대토론회 자료집 발제문

- 교과서, 무엇이 문제인가 / 13
박효종(서울대 교수)
- 전교조 교과서의 왜곡과 무의식의 지배 / 55
정재학(전남 삼호서중학교 교사)
- 우리나라 교과서 검정 및 채택 체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 83
이명희(공주대 교수)

교과서, 무엇이 문제인가

박 효 종(서울대 교수)

교과서, 무엇이 문제인가

박효종(서울대 교수)

I. 문제의 제기

한나라의 교과서는 그 나라의 헌법 못지않게 정치공동체의 뿌리가 되는 기본가치와 정향을 담고 있다. 양자에 차이가 있다면, 헌법은 공동체구성원 성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구속력을 가진 법적 규범인 반면, 교과서는 지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차세대 예비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적 전범(典範)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교과서는 선(先)세대가 자신들이 애써 일구고 가꾸어 놓은 결실과 성취 및 가치관을 후(後)세대에게 전달함으로써 같은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는 공동체 구성원으로 만드는데 필수적인 교육적 기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교과서가 ‘한국인’이라는 올바른 자각을 갖게 하는데 귀중한 도움을 주는 정체성 형성기능을 비교적 만족스럽게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가하는 반성적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물음에 대하여 본 연구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대답하고자 한다. 왜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논문의 목적이다.

한국사회에서 교과서의 위상은 각별하다. 교과서는 중·고등학교학생들이 교실에서 배우고 익혀야할 필수적 자료가 될 뿐 아니라 내신 성적의 기초가 되는 학교시험에서도 핵심적 자료가 되며, 특히 대학입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수능시험의 기본 자료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교과서들에 대하여 한국의 근·현대를 치열하게 살아온 한국인의 삶은 물론, 풍요하고도 역동적인 발전과정을 거처 온 사회·정치·경제현실을 제대로 담아내야 한다는 기대를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렇다면 그런 기대가 현실적으로 충족되고 있는가. 유감스럽게도 그런 기대를 무색케 할 정도로 현행교과서들은 편향된 역사관과 잘못된 사실인식에 기초하여 1948년의 건국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룩해온 한국인들의 삶의 질과 궤적을 심각한 수준으로 왜곡하고 있다.

우선 현행 중·고등학교 근현대사 및 사회과교과서들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사실에 대한 충실성, 즉 ‘리얼리티’가 결여되어 있다. 물론 사실의 나열만이 교과서의 기능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실의 기술에는 필연적으로 평가가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평가야말로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겠는가. 그러나 평가적 관점이 ‘외눈박이’를 연상시킬 만큼 지나치게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다. 한국인들이 광복 60년 동안 피땀을 흘리며 일구어온 역동적 삶과 자화상이 충실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이룩해놓은 성취가 갖는 문명사적 의미와 민족사적 의미가 제대로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교과서에는 ‘사실’과는 다른 진술과 ‘진실’을 왜곡한 자기 비하적 평가가 주류를 이룰 정도로 만연되어있다. 교과서는 후세대교육을 위한 거울의 기능을 담당하는 만큼, 일부 국수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랑스러운 사실과 긍정적 평가만으로 일관할 수는 없는 일이다. 또 인위적인 ‘영웅만들기’와 ‘신화만들기’에 힘을 쏟을 필요는 없다. 그것은 ‘나르시시즘’을 상기시킬 만큼 부질없는 자기애와 자기도취이기 때문이다. 성찰적 서술이나 비판적 평가가 요구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비판적 성찰이나 ‘자기 채찍질(self-flagellation)’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실’과 ‘진실’을 왜곡하거나 외면할 정도로 근거 없는 자기편하나 자기학대적 평가를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현행교과서에 내재해있는 사실왜곡이나 자기 비하적 서술과 일방적 평가는 크게 몇 가지 부분으로 요약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건국을 하나의 ‘에피소드’한 사건정도로 치부하고 산업화와 근대화를 ‘왜곡된 근대화’로 폄하하는 한편, 실패한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가치의 혼란을 야기할 정도로 우호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화로 수렴되는 정치·사회변화를 설명하는 접근방식이 정치성향의 저항적 운동사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도 특기할만한 사항이 아닐 수 없다.

이번 논의에서는 사실의 왜곡에 대한 문제점보다 관점의 편향성이 두드러진다는 점에 치중할 예정이다. 생각해보면, 사실의 기술과 평가적 관점의 선택은 불가분의 관계가 아닐 수 없다. 관점에 따라 사실을 취사선택하고 과대포장이나 생략 등, 왜곡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객관적이며 중립적인 평가적 잣대를 찾는 일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어떤 관점이라도 편향성은 일정수준 내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제는 교과서 저자들의 관점, 보다 근본적으로 교육과정을 짜고 교과서 지침서를 만들어주며 검인정기준을 마련해준 교육당국의 비전과 관점이 2세교육의 차원에서 얼마나 설득력을 가지며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고등학교 교육의 차원에서 교과서저자들의 일방적 관점과 교육당국의 입장이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와 관련하여 근·현대사와 사회과교과서들에 암암리에 내재해있는 네 가지 경향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점들을 집중 제기하고자 한다.

II. 문명사적 관점의 결핍 : ‘에피소딕’한 사건이 되고 있는 대한민국 건국과 근대화

광복 60년 동안 이루어진 한국의 현대사에서 주목할 만한 역사적 사건 셋을 꼽는다면, 무엇을 들 수 있을까. 두말 할 나위 없이 건국과 산업화 및 민주화일 것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한 가지 ‘세만틱(semantic)한’ 사건을 선정한다면, 단연 1948년 8월15일의 ‘대한민국 건국’, 즉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지적해야 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 자명하다. 산업화와 민주화는 공히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건국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대한민국 정치공동체의 온전한 구성원으로서 정체성과 양식을 지닌 시민이라면 당연히 알고 익혀야 할 사실이며, 중·고등학교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기본적인 교육 자료가 아닐 수 없다. 마치 외국인이 미국인이 되기 위한 시민권을 신청할 때 미국건국과 ‘건국 아버지들(Founding Fathers)’에 관한 사실에 정통해야 하듯이 말이다.

헌법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는 바, 자유와 인권, 및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은 제한된 정치권력을 규정한 영국의 『권리장전』이나 프랑스 대혁명의 자유·평등·박애의 이상 및 미국의 『독립선언서』에서 나타난 생명·자유·행복추구권 등의 이상과 같은 맥락의 ‘문명사적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근·현대사 및 사회과 교과서를 통해 이루어지는 학교교육은 대한민국 건국이 초석으로 삼고 있는 헌법적 가치인 자유와 인권, 및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중·고등학교학생들에게 교육함으로써 그들을

대한민국의 성숙한 시민으로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한 걸음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건국을 통해 이념으로 구체화된 이러한 헌법적 가치들은 앞으로 남북통일이라는 중차대한 민족적 과업을 성취해 나아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단호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견지해 나가야 할 기본적 가치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유감스럽게도 관련되는 교과서들로부터 그러한 범주의 2세 교육을 배려하는 가치 지향적 서술을 발견할 수 없다.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의 내용이나 윤곽조차 소개되고 있지 않다. 예를 들면 금성출판사 교과서를 보면, 상해임시정부의 헌장은 학습 자료로 소개하고 있으면서(p.177)도, 막상 대한민국헌법은 나와 있지 않다.

금성출판사 교과서를 비롯한 모든 근·현대사 교과서들은 대한민국 건국을 해방직후 미군정과 일부 정치·사회세력에 의한 ‘대한민국정부 수립’ 정도로 ‘에피소드화’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면 할애도 매우 인색하다. 물론 중요한 것은 다루는 ‘양’보다 서술의 ‘질’일 것이다. 하지만 다음 금성출판사 교과서의 표현을 보면, 정부수립의 의미자체도 평가 절하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통일정부의 건설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과 여러 정치세력들의 반대 속에 1948년 5월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세우기 위한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중략) 남한만의 정부가 세워진 것은 통일 민족국가의 수립이 실패로 돌아갔음을 뜻하였다.”(p.264)

이러한 부정적 서술과 평가는 교과서 저자들이 통일지향과 분단사적 관점에 배타적으로 심취한 나머지 대한민국 국가의 수립이 갖는 문명사적 의미를 경시내지 간과하고 있음을 뜻한다. 저자들은 분단된 국가공동체의 정부수립은 별로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단정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과연 그러한 인식이 타당한가. ‘문명(civilization)’이란 ‘야만(barbarism)’과 대립되며, 노예제, 세습적 불평등, 권력전횡 등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서구의 종교개혁, 르네상스, 프랑스혁명, 계몽주의를 통해 보편적 가치로 확립된 인권(human rights)과 인본주의(humanism), 민주주의(democracy), 다원주의(pluralism), 사적 영역(private sphere)의 보장 등의 가치를 함유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해방 후 우리가 민주주의와 입헌주의를 지향하는 근대민주국가로 세웠다는 것은 문명사적으로 의미심장한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공동체구성원들에게 명령과 지시를 내리는 중앙집권적 권력기제가 수립되고 또 특정한 정치·사회세력이 다른 세력을 따돌리고 정치 권력을 장악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함축하기 때문이다. 입헌·민주국가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는 개인과 사회집단을 ‘강압적인 방식’보다 ‘이성적인 방식으로’ 통합하는 정치적 기체로서, 이러한 성격의 신생 민주국가가 출범했다는 것은 단순히 ‘공공재문제(public goods problem)’의 해결기체로서 정부라는 기능적 권력체의 수립을 넘어서서 한국인들이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정치·사회·경제·문화적 삶의 새 지평을 연다는 차원에서 문명사적으로 ‘기념비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점은 전체주의성향의 사회주의국가를 세웠던 북한주민들이 오늘날 봉착해있는 열악한 반인권적 상황과 비교할 때 선명하게 부각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교과서 저자들은 대한민국 정부수립이 단순한 일회성의 ‘에피소드(episodic)’한 사건이 아니라 삶의 ‘패러다임 변화(paradigm shift)’라는 장기적이며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 그야말로 ‘세만틱(semantic)’한 사건임을 간과하고 있다.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을 계기로 하여 유교적 질서의 전근대적 ‘조선인’은 근대의 ‘한국인’으로 탈바꿈하였다. 그와 동시에 개인들의 사회적 협력과 경쟁, 대립 및 통합의 논리와 게임규칙(rule of the game)이 달라졌으며, 새로운 질서의 규칙이 도입되고 집단과 분리된 개인이 독립적 존재로서 ‘권리의 담지자(bearer of rights)’로 출현하여 인격체(person)로 대우받고 시장경제와 시민사회가 약동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으로써, 개인들의 삶의 비전이 펼쳐지는 무대와 환경이 질적으로 변화하였다. 문제의 상황은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나 존 로크(John Locke) 등, 고전적 사회계약론자들의 표현을 차용한다면, 자연 상태에서 계약에 의하여 국가를 만들 때의 상황과 비교할 수 있을 만큼 상전벽해(桑田碧海)의 현격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건국과 더불어 장기적으로 실현되어갈 ‘문명사적 대전환’은 우리 민족의 활로에도 심대한 의미를 투영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국가공동체가 지향하고 있는 정치적 이상과 이념의 실현을 위한, 대장정(大長征)의 의미심장한 첫 걸음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교과서들을 보면, 한결같이 정부수립은 한갓 단정(單政)을 찬성하는 특정범주의 권력지향세력에 의한 집권사건정도로 평가절하되고 있다.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에 대해 정치세력들은 서로 다른 견해를 보였다. 이승만과 한국 민주당은 이에 찬성한 반면, 좌익 세력은 남

한 정부의 수립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곳곳에서 벌였다.”(금성출판사 p.262)

교과서 도처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유형의 서술들이야말로 교과서의 저자들이 대한민국의 건국에서 음미할 수 있는 문명사적 의의나 민족사적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요소들이라고 하겠다. 또한 대한민국건국을 ‘에피소드화’하는 접근방식과 발상이야말로 현행 교과서들에서 대량으로 노정되고 있는 자기 비하적 현대사서술과 평가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처럼 “첫 단추를 잘못 낀” 만큼, 대한민국 헌법의 소개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뿐 아니라 초대대통령인 이승만에 대한 독사진은커녕, 온갖 권력욕의 화신처럼 묘사되어있는 것이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그런가하면 문명사적 비전의 결핍문제는 건국과정 뿐만 아니라 근대화에 대한 서술과 평가에서도 현저하게 들어난다. 한국의 성공적인 산업화와 근대화가 문명사적 관점에서 갖는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한국의 성공적 산업화야말로 산업혁명은 서구선진국들의 전유물이며 제3세계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일반적 인식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절대빈곤상황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것은 단순히 후발국이 성취한 자본주의 발전의 차원을 넘어서서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 정립의 차원에서 평가받을 만한 것이다. ‘한강의 기적’이 단순한 경제발전이 아니라 문명사적 의미를 갖는 사건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시민·기업·정부의 신뢰구조가 있어 가능했다”고 분석한 미국의 프랜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의 견해에서 상징적으로 음미할 수 있다. 개발연대에 농촌과 도시, 부자

와 빈자 간에 심각한 갈등요소가 발생했던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갈등요소를 노동자는 기업과 정부를, 기업은 노동자와 정부를, 정부는 기업과 노동자를 신뢰하면서 해결했다고 본 것이다. 이른바 ‘도덕자본(moral capital)’이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으로 간주되는 ‘신뢰’의 관점에서 바라본 그와 같은 평가적 시도는 막스 베버(Max Weber)가 서구자본주의의 용성을 ‘프로테스탄트윤리’의 관점에서 조망한 것에 비교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한국 근·현대사와 사회과 교과서는 그런 평가적 상상력을 발휘하고 있지 않다.

특히 성공적인 60년대의 산업화의 기초를 닦은 것으로 평가받는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에 있어서도 “불완전한 농지개혁, 절반의 성과”라는 제목으로 “유상몰수 유상분배”의 개혁의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금성출판사의 경우, 참고자료로서 “당시 북한의 농지개혁은 무상몰수 무상분배방식으로 실시하여 농민들에게 더욱 유리한 개혁이 되어 북한에는 지주가 사라지고 빈농이 줄고 중농이 다수를 차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p.322)”고 설명한다. 하지만 그와 같은 강압적인 소유권 탈취의 사회주의적 방식이 절차민주주의와 시장질서의 존중과 보장을 규정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부합되는지에 대하여 교과서저자들이 엄숙하고도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아쉬울 뿐이다.

특히 ‘압축 성장’으로 특징지어지는 박정희 시대의 경제성장과정을 다루는 부분에서 흥미로운 것은 고도성장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에 못지않게 혹은 그보다 훨씬 강한 어조로 부정적 측면을 조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면서도 항상 “그러나” 혹은 “그럼에도”와 같은 제한적 접속사를 붙임으로 부작용과 문제점을 더욱 현저하게 부각시키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현대사 교과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회과 교과서들도 1960년대 이후의 한국 경제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했고 또 그에 따라 전통사회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면, 디딤돌 출판사의 사회과교과서는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저임금과 저 농산물 가격정책을 취하여 노동자와 농민에게 희생을 강요하였으며, 그로인해 계층 간의 빈부격차, 도시와 농촌과의 불균형, 대기업으로의 경제력집중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교과서 저자들이 좀 더 사려 깊게 문명사적 시각을 가지고 접근했다라면, 박정희 정부의 성공한 산업화가 많은 제3세계 국가들로부터 벤치마킹하는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한국이야말로 제3세계의 최빈국에서 도약을 하는데 성공한 거의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의 박정희 정부가 주도한 수출지향 산업화는 그 개념자체가 새로운 것이었다. 당시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내부지향적 자립경제모델’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름지기 대한민국의 교과서라면 대한민국이 왜 전례 없는 ‘외부지향적·수출지향적 성장모델’을 채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시대적 배경, 또 이 모델이 성공함으로써 많은 개도국들이 문제의 모델을 채택하고 이제는 선후진국 할 것 없이 외부지향 수출지향모델이 21세기에는 전반적인 성장모델이 된 계기가 되었다는 점을 자라나는 2세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지 않을까.

Ⅲ. 민족분단사적 관점의 과잉 : 융숭한 대접을 받고 있는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

근·현대사 교과서 저자들은 강박관념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분단의 역사’와 ‘통일의 당위성’에 지나치게 역점을 두고 있다. 금성출판사에 따르면, 한국의 현대사는 곧 “분단의 역사”이다(p.27). 이로써 한국현대사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건국도 아니고 산업화도 아니며 오로지 분단 그 자체다(전상인 2005, 35). 이런 경향은 천재교육(p.36) 등 다른 교과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그 결과 이채로운 현상 가운데 하나는 이승만보다 여운형에 지나친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교과서 저자들은 해방정국의 주도세력과 관련하여 건국동맹, 인민공화국으로 이어지는 여운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운형은 “상당한 정세파악과 정치적 감각을 갖춘 인물”로 평가되고 있으며, “건국준비위원회발족에 즈음하여 여운형과 조선 총독부사이에 정권인수회담이 있었다(금성출판사 p.255)”고 기술되어있을 정도다. 그가 임정이나 해방정국의 주도적 범통이였는가 하는 점은 별개의 논란거리가 되겠지만, 그 논란이 어떤 방식으로 정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초대대통령인 이승만에 대한 홀대는 이해하기 어렵다. 근·현대사 교과서 가운데 천재교육만이 “미국에서 독립운동의 상징적 존재”라고 언급할 정도로 이승만은 푸대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푸대접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이승만이 대한민국의 초대대통령이라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 때문만은 아니다. 이승만 자신이 한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고 진력한 독립운동가였

을 뿐만 아니라, 민주공화국으로서의 건국을 구상한 인물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의 독재정치가 면죄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많은 교과서에서 일방적으로 서술되는 것처럼, 친일파숙청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부정선거를 통해 장기집권을 시도하다가 4·19혁명으로 권좌에서 축출된 점만을 부각시키는데 치중한 나머지, 독립운동과 건국노력 등, 신생국가 건설의 긍정적 업적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도 없다는 사실은 매우 공정하지 못한 처사라고 하겠다. 그에게도 다른 탁월한 정치인들과 마찬가지로 공(功)과 과(過)가 함께 섞여 있다고 할 때, 독재의 흠이 작지 않다고 해서 그가 기여한 바 문명사적 가치를 갖는 시민적·정치적 질서의 틀을 제공한 건국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박정희에 대한 서술도 마찬가지이다. 박정희가 이룩한 성공적인 산업화는 반공독재에 가려 빛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금성출판사 교과서저자들이 그를 바라보는 것은 갖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근대화 를 성공시킨 이룬 인물이라기보다는 “국가안보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정치적 안정이 중요하다는 구실을 내세우며 강압적인 통치에 나선 인물(p.288)”로서, 5·16 군사정변을 일으킨 장본인, 유신 독재의 인물로만 부각되고 평가받고 있다. 박정희가 나오는 단원도 “5·16군사정권과 유신체제”라는 제하의 이름하에서이다(p.284~289).

그런가하면 6·25전쟁에 대한 서술도 민족 분단사의 관점에서만 배타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6·25전쟁은 우리민족에게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를 강요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민족의 뉘 속에 오랫동안

치유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남긴 재앙이며 비극이라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따라서 결코 이런 불행한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과서의 서술처럼 배타적으로 민족의 관점이나 통일의 관점, 혹은 맹목적인 평화주의의 관점에서만 전쟁을 조망하는 것이 2세교육의 관점에서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이른바 ‘조국해방’이란 명목아래 북한이 전체주의성향의 사회주의체제와 이념으로 한반도를 지배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도발한 전쟁임을 감안 할 때, 당시 대한민국의 건국을 통해 수립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질서가 심각한 위협을 받았으며 민주공화국의 생존자체가 위기에 처했다는 명백한 사실을 간과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것인가.

비록 휴전으로 귀결되어 전쟁이전과 별다른 영토의 변화는 없었고 지금까지 분단 상태는 지속되고 있지만, 6·25전쟁은 남침한 북한에 맞서 남한이 싸웠다는 단순한 민족상잔의 비극을 넘어서서 결의에 찬 북한전체주의자들의 공격으로부터 남한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질서를 방어한 전쟁으로 평가받아야한다. 근·현대사교과서가 이러한 가치론적 사실을 도외시하고 단순히 전쟁의 인명피해, 경제적 피해 등만을 강조한다면, 이 전쟁에 참전했거나 참전과정에서 죽음을 맞이하거나 부상당한 많은 사람들, 특히 한국인들은 결국 그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는 동족상잔의 내전에 연루되어 부조리한 행동과 도로(徒勞) 및 허무한 희생을 한 셈이 되지 않겠는가.

물론 6·25를 배타적으로 전체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의 대결로만 평가할 필요는 없을는지 모른다. 적어도 교과서저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만일 전체주의라는 반문명적 도전에

대하여 자유라는 문명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싸웠다고 서술한다면, 남북화해라는 통일지향의 민족주의의 관점에서 문제가 된다고 우려한 것이 아닐까.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6·25를 “실패한 통일전쟁”으로 불러야한다는 통일지상주의자들의 시각과 다를 바 없다. 그것은 분명 민족사적 관점의 과잉이다. 왜냐하면 6·25 전쟁에서는 전체주의세력의 도발에 굴복하지 않고 자유주의세력이 끝까지 방어에 나섰다는 전쟁의 문명사적 의미를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수많은 인적·물적 피해에도 불구하고 독일 등 주축국의 공격에 과감히 맞서 항거한 연합국들의 가치지향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과서에서 6·25전쟁을 이른바 ‘성전(holy war)’이나 ‘십자군전쟁(crusade)’으로 불러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슬람사람들이 흔히 ‘성전’으로 부르거나 중세 기독교인들이 ‘십자군전쟁’으로 불러왔던 것은 종교를 위한 전쟁이었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종교적 근본주의자들이나 종교적 열광주의자들이 참여하는 호전적 전쟁의 성격도 지니고 있었다. 당연히 6·25전쟁은 성지를 탈환하거나 이단을 몰아내기 위한 종교적 열정이 촉발시킨 전쟁은 아니었다. 따라서 교과서에서 ‘한국판 성전’이나 ‘한국판 십자군 전쟁’으로 부른다면, 역시 과잉평가라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후세들에게 6·25 전쟁의 올바른 의미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적어도 ‘정당한 전쟁(just war)’이라는 평가는 해야 된다. ‘정당한 전쟁(bellum justum)’이란 올바른 명분을 가진 ‘방어적 전쟁’이라는 의미로 중세의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가 규정한 이래 도덕적 가치를 가진 전쟁으로 평가받는 경우이다. 대한민국이 치룬 6·25 전쟁은 자유와 인권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유린하려는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에 분연히 맞서 목숨을 걸고 방어한 전쟁이다. 자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싸웠다는 사실이 교과서에서 강조되지 않으면, 6·25는 무의미하며 몰가치적인 민족 내부의 전쟁으로 전락하여 참전한 세대는 이른바 ‘잃어버린 세대 (lost generation)’로 전락하고 후세들은 전쟁의 허무주의(nihilism)만을 배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한편 북한의 역사와 체제에 대한 근거 없는 우호적 서술이야말로 통일주의과잉과 분단사적 관점의 절정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북한의 참담한 실상은 상식화되어있을 정도로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고 양식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신랄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있다. 그렇다면 근·현대사교과서들은 이러한 보편적 지성의 흐름에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가. 놀랍게도 전체주의성향의 일인독재, 대량아사, 인권탄압, 탈북난민자의 속출, 핵개발 등 북한체제가 노정해온 문제점들을 비교적 문명사적 관점에서 서술하고 평가하거나 혹은 적어도 한국의 경우와 어느 정도 균형 있게 비판적으로 서술하기보다는 북한의 이념과 체제를 ‘우리식 사회주의’의 관점이라는 내재적 접근방식을 통해 파악하려는 시도가 두드러진다. 루이지 린저의 북한 기행문을 실어 “김일성의 교시는 곳곳에서 인용되며 거기에 인민들은 늘 귀를 기울이고 있다(p.302).”는 금성출판사의 서술이야말로 이에 대한 단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다.

북한체제에 관한 교과서 서술의 문제점은 최대한 우호적으로, 아니면 최소한 중립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일성이 6·25전쟁 이후 박헌영의 남노당계와 소련과, 연안파 등을 숙청한 사실은 지

적하고 있지만, “사회주의 국가건설이라는 이념적 명분을 가지고 있었으며,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던 김일성 측(p.300)”이라고 기술함으로써 한국의 권위주의체제에 대하여 엄격한 비판을 했을 때처럼, 그것이 김일성의 권력욕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정치공학적 서술은 눈에 띄지 않는다. 또한 이런 권력투쟁과정을 거쳐 확립된 1인 지배체제가 오늘날 북한 주민들을 고통과 억압, 기아, 노예상태로 몰아넣은 ‘수령전체주의’ 체제성립의 토대가 되었다는 서술과 평가 역시 찾아볼 수 없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비정상적인 권력의 부자세습에 대하여도 그 어떤 비판적 서술이나 평가도 찾아볼 수 없다.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하자 자연히 북한의 권력은 김정일에게 돌아갔다(p.307)”고 기술함으로써 어떤 가치평가도 엄격하게 배제하려고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 이런 서술방식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권력을 물려주는 권력세습은 민주주의국가는 물론, 공산주의국가에도 없었다. 교과서 저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의 특징이라고 학생들에게 정당화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북한식 전체주의적 통치체계에서 정치·사회·경제적 질서의 궁극적 원리는 수령인 김일성 혹은 김정일의 개인적 성향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포정치와 비밀경찰에 의하여 유지되며 변덕스럽기 한이 없는 명령체제, 즉 현대판 전제정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북한의 질서체계를 ‘우리식 사회주의’나 ‘유훈 통치’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과 진실을 왜곡하는 부정직한 서술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지적은 북한의 경제부진의 문제를 설명할 때에도 유효하다. 그럼에도 금성출판사 교과서는 북한 경제의 실패와 관련해 철저한 계획경제와 지나친 자립경제정책 및 힘겨운

국방비지출 등의 요소로 설명함으로써 문제의 핵심을 교묘하게 피해나가고 있다.(p.305) 실상 북한 경제의 문제와 관련하여 일부학자들은 계획경제의 문제가 아닌 무계획경제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예를 들면 “김일성의 현장지도가 상징하듯이 북한경제는 임시변통적이며 무질서한 명령에 좌우되었으며, 그러한 북한경제는 대단히 경직된 무계획 경제이다.”라는 것이 이영훈 교수(2005, 42)의 견해다.

그런가하면 1984년의 합영법과 나진·선봉 경제특구 등의 흐름을 학습자료 형식으로 소개하면서도 그 핵심적 문제점인 ‘모기장식 개방’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김정일 체제의 북한은 외교와 기술관료를 중심으로 정치경제발전을 위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p.307)는 식의 긍정적 서술만이 있을 뿐이다. 김정일 시대의 북한을 이해하는 키워드인 선군정치는 아예 용어조차 소개하지 않고 있다.(신지호 2005, 72)

한편 식량난과 탈북자에 관해서는 “심각한 식량난으로 탈북자가 늘어나고, 김정일에 대한 북한주민의 신뢰는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p. 307)”라는 정도로 중립적으로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 한국의 삼청교육대에 대해서는 사진과 설명을 첨부할 정도로 비판에 적극적이지만(p.293), 가혹하기 짝이 없는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 관해서는 일언반구의 언급조차 없다. 당연히 대량아사, 정치범수용소, 공개처형, 마약밀매, 위조달러제조, 한국인 및 외국인 납치 아웅산 및 KAL기 테러 등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다.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막대한 군사비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북한은 1990년대 전반 핵무기를 개발하

고 있다는 국제적 의심을 받았다”(p.314)는 식의 중립적인 서술만이 눈에 떨 뿐이다. 물론 이러한 서술경향은 금성출판사만의 문제는 아니다. 다른 교과서들도 북한의 열악한 인권사항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은 점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왜 이런 ‘외눈박이 서술’이 가능한 것일까. 무슨 까닭에 교과서들이 한국에 대해서는 혹독한 ‘외재적 접근’을 하는 반면, 북한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내재적 접근’을 하는 것일까. 예를 들면 한국의 유신 체제에 관하여는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이름아래 민주주의가 아닌 독재체제로 나아간 것이 유신체제였다(p.288).”라고 타당한 비판의식을 갖고 진술하고 있다면, 북한에 대하여는 어떻게 기술했어야 했을까. 혹시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이름아래 사회주의가 아닌 수령전체주의로 나아간 것이 북한의 김일성·김정일 체제였다.”라는 식으로 언급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북한이 말하는 우리식 사회주의란 당면한 문제를 스스로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자는 것이었다. 북한은 이를 뒷받침해주는 근본적인 힘으로 조선민족 제일주의를 들고 있다(p.306).” 또 조선민족 제일주의와 관련하여 세심한 설명도 첨가된다. “우리는 오랜 세월동안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창조적 활동으로 훌륭한 문화유산을 남기고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온 뛰어난 민족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한다(p.306). 그런가하면 다음과 같은 중립적 표현도 나온다. “북한은 1972년 헌법을 개정하여 사회주의헌법을 공포하였다. (중략) 사회주의헌법은 김일성의 유일지도체계를 명확히 하였다. 또한 국가주석제를 도입하여 김일성을 주석에 추대하였다. 주석에 절대적인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수령의 유일한 영도체계를 확립하는 권력기초를 마련하였다(p.303).”

이런 차별적 서술현상을 어떻게 평가해야할까. 교과서저자들과 교육당국은 통일을 지향하기 때문에 통일의 대상이며 파트너로서 북한을 감싸기 위해 북한의 어두운 면을 의도적으로 조명하지 않았다고 강변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의문이 있다.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인권이나 인본주의 등을 포함한 문명사적 가치를 말하지 않는다면, 통일이 되었을 때 문명적 가치들이 강물처럼 흐르는 ‘선진문명국가’가 되리라는 점은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김정일 수령체제는 반문명적 현상이기에 통일한국으로 계승될 수 없음은 분명한데, 이러한 사실에 눈을 감은 무책임한 서술 형태는 단순한 ‘북한 감싸기’가 아니라 반인권, 억압 등의 거악과 반문명적 야만행위를 감싸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교과서저자들은 인식하고 있지 못하단 말인가. 또한 그럼으로써 인권에 무심한 학생들을 양성하게 된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런 무지는 최악인 것이다.

IV. 눈에 거슬리는 ‘정치공학적 환원주의’

근·현대사 교과서저자들의 서술에는 일정한 공통점이 있다. 건국이나 산업화 등의 거시적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상황을 서술내지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집권자개인의 권력욕 차원이나 정권의 정당성 확보차원으로 환원시켜 해석하는 저급한 이해수준을 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금성출판사 교과서의 다음과 같은 내용은 현저한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이승만 정부는 집권 후 부패척결이나 친일파 청산 등 민중의 요구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권력을 강화하는데 힘을 쏟았다.”(p.277)

“1961년 5월16일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일부군인들은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였다. (중략) 군정세력은 반공을 국시로 내걸고 경제개발과 사회 안정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정변을 일으킨 직후 부정축재자를 처벌하고 불량배를 소탕하였으며 농어촌부채를 줄여주고 농산물가격을 안정시키는 정책을 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 군사정변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으로, 호지부지 끝나거나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p.285)

“박정희정부는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개발과 반공을 국가운영의 전면에 내세웠다. 한일국교정상화와 베트남전 참전은 이러한 정책의 일환이었다.”(p.286)

이러한 표현들을 보면, 이승만 대통령의 국가건설노력이나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 노력과 관련, 국정책임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시대정신이나 국가적 요구를 관독하여 실천에 나섰다는 측면보다는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만 접근하고 있다. 집권자의 권력욕이나 정권의 정당성제고의 논리가 압도적이어서 정치적 소명의식의 발로와 같은 것들은 아예 찾아볼 수 없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정치인, 즉 ‘호모폴리티쿠스(homo politicus)’에게 있어 ‘권력욕(libido dominandi)’이나 ‘권력의지(Wille zur Macht)’란 ‘원초적 본능’과 같은 것이다. 하지만 같은 권력의지를 가진 정치인이라고 하더라도 ‘성공한 정치인’과 ‘실패한 정치인’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혹은 ‘유능한 정치인’과 ‘무능한 정치인’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은 문제의 권력욕이나 권력의지를 승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당연히 건국의 구상과 국가건설에 나선 이승만이나 박정희의 경제개발 노력에 권력의지의 측면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특히 박정희는 쿠데타를 통한 집권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발전에 더 치중한 면이 있다(김일영 2005, 161).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가건설이나 경제발전은 각기 당시의 시대가 요구하는 국가적 과제이자 시대정신이기도 했음을 잊어서는 곤란하다. 단정수립은 통일정부의 전망이 모호한 상태에서 무한정 통일정부를 기다릴 수 없다는 시대적 요청이 있었고 또한 박정희가 추진한 경제개발도 국가생존전략의 일환으로 절체절명의 시대적 소명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도외시한 채 국가건설이나 경제개발노력을 정권유지 차원에서만 언급하는 것은 천박한 서술이며 지나친 폄하가 아닐 수 없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

국의 현대사를 설명할 때 교과서저자들에게 헤겔이 말한 ‘이성의 위계(cunning of reason)’나 ‘절대정신(absolute spirit)의 발현’과 같은 거대담론을 동원해야한다고 주문하는 것은 아니지만, 건국이나 국가건설 및 산업화를 개인 권력욕의 차원으로만 환원시켜 설명하는 것은 분명히 불공정한 서술과 평가로서 정당성을 결여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북한의 경우는 시종일관 김일성의 권력욕보다 ‘우리식 사회주의 가꾸기’로 일관되어있는 것을 감안해 보면, 학생들에게 가치혼란을 부추길 정도로 지나친 불균형적 서술이 아닐 수 없다.

이채로운 것은 김대중 정부의 대북화해협력정책과 남북정상회담추진에 대해서는 권력욕이나 정권정당성 제고 등의 정치공학적 평가 없이 역사적 의미를 아낌없이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금성출판사 교과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2000년 6월13일 남한의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평양 순안 비행장에서 만나 뜨거운 포옹을 하였다. 분단이후 최초로 남북정상이 만나는 역사적 순간이었다(p.315).” 뿐만 아니라 남북의 두정상이 손을 맞잡고 활짝 웃는 모습의 사진도 실려 있다. 건국이나 산업화의 경우와는 달리 북방정책과 햇볕정책에 대한 이러한 차별적 서술과 평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것은 통일과잉주의에 취한 나머지 다른 문명사적 사건들을 평가할 안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한편 또 다른 측면에서 짚어야 할 점이 있다. 근·현대사의 교과서를 읽어보면, 분단의 지속이나 민주주의의 실패를 반공주의와 반공체제에서 찾고 있는데, 금성출판사 교과서가 대표적이다.

“이승만은 선거결과 가장 많은 당선자를 낸 무소속중 우익성향의 의원들을 끌어들이며 국회서 다수의 세력을 차지 할 수 있었다. (중략) 이승만 정부는 국회안의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반공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p.264).”

“휴전이후 이승만 정부는 북한과 대화와 타협을 시도하지 않은 채 철저한 반공·반북 정치를 고수하였다(p.308).”

“박정희정부는 반공을 집권의 명분으로 삼고 강력한 반공정책을 수행하였다(p.308).”

그러나 반공이념과 체제에서 한국현대사의 실패를 찾고자 하는 이와 같은 교과서서술이 2세 교육에 적합할 만큼 올바른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분명히 한반도의 대립되는 두 체제, 즉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20세기 문명의 심장부에 내재해온 자유와 전체주의간의 깊은 긴장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세기 세계사의 전반적 흐름에 주목해보면, 국가사회주의와 계획경제는 자유와 인권, 자율, 사적영역의 보장, 인본주의라는 인간의 천부적 가치에 반하는 체제와 이념이었음이 판명되고 있다. 바로 그와 같은 반인륜적 반인권적 가치 추구로 인하여 국가사회주의는 실패의 조짐을 보였고 결국에는 내면에서부터 붕괴되는 운명을 맞이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의 국가건설자들은 혼란된 해방공간의 와중에서 암중모색하는 가운데 이념과 가치적으로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올바른’ 선택을 하였으며, 이러한 평가는 근대화추진자들

에게도 해당된다고 하겠다. 또한 바로 그 이유로 인하여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동의와 공감 및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국가사회주의와 전체주의를 반대하는 반공주의가 스피노자의 표현대로 ‘영원한 빛 아래(sub specie aeternitatis)’ 정당화될 수 있는 ‘올바른 가치와 이념’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시대의 빛 아래(sub specie durationis)” 혹은 “역사의 빛 아래(sub specie historiae)” 조망해볼 때, 우리가 취한 최선의 이념적 가치와 선택이었다. 또한 이 선택은 동시대를 치열하게 살아간 많은 국민들의 자발적 선택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저자들이 대한민국정부를 수립하고 근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대 한국인들이 택한 이념적 선택과 실천을 단순히 강압적인 ‘극우반공독재’에 대한 순응으로 간주하고 있다면, 이것은 역사적 사실과 진실에 눈감은 왜곡된 역사쓰기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역사 앞에 정직하고 겸손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만일 북한처럼 사회주의 일당독재체제를 선택하였다면, 지금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노무현대통령도 2003년 미국 방문 시 “6·25 때 미국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나 자신도 북한의 강제수용소에 갇혀있었을지 모른다”는 소감을 피력한 적이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물론 반공주의에는 오·남용이 많았다.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반공주의가 그 자체로 잘못되었다거나 권력욕의 수단이라고만 비하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것은 마치 중세 기독교인들의 종교적 실천과 비슷하다. 기독교신자들은 십자군전쟁을 통해 이슬람신자들을 대량으로 가혹하게 죽이기도 하였다. 또 마녀재판을 통하여 무고한 여인들을 희생시켰다.

그런가하면 이단을 없애겠다는 명분하에 창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화형에 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하지만 이런 사례들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오·남용적 실천이었을 뿐, 그리스도교적 신앙자체가 잘못되었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반공주의도 그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공주의자들이 1958년의 진보당사건의 경우처럼 사회민주주의자들까지 처형한 것은 관용부족의 참담한 오·남용사례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이것은 반공이념이나 반공체제가 그자체로 거악(巨惡)이라는 문제와는 다른 것이다. 따라서 반공은 당시의 시대상황에서 우리국민들이 택한 올바른 선택이었음이 교과서에서 지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통일이 우리 앞에 놓인 민족적 대과제라는 점에 동의하지만, 근·현대사교과서 저변에 흐르고 있는 통일과잉주의에 대하여는 동의하지 않는다. 통일과잉주의는 통일만능주의처럼 통일자체가 ‘최고의 선(highest good)’으로서 다른 모든 가치들을 규제하고 아우를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이다. 분명 남북한의 통일은 민족사에 부여된 성스러운 과제이다. 그렇지만 통일은 어디까지나 자유와 인권이란 문명사적인 가치가 실현되는 과정이어야 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통일은 자유와 인권에 바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건국이념과 헌법적 가치가 아직도 그와 같은 문명국가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북한으로 확대·실현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자명하다. 북한주민들은 전형적으로 플라톤이 말한 ‘동굴의 우화’에 나오는 존재처럼, 쇠사슬에 묶여 태양을 보지 못한 채 그림자만 보며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햇빛을 비추어 대명천지(大明天地)의 문명사적 가치를 볼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바로 이것이 진정한 ‘햇볕정책’의 의미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교과서의 각종 서술에서 흐르고 있는, 이와 같은 문명사적 관점과 가치들이 배제된 무분별한 통일만능주의나 통일과잉주의가 수정되지 않는 한, 학생들은 ‘아노미(anomie)’ 현상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논의의 맥락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교과서에는 대한민국의 건국과 근대화에 공적이 현저한 역대대통령들의 독사진이 없다는 사실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자유와 인권 및 민주주의에서 실패한 북한체제의 통치자들은 웃는 얼굴로 우리학생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이러한 차별적 서술이 학생들에게 어떠한 교육적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하여 교과서 저자들은 고민을 해보았는지 묻고 싶다.

V. 정치지향적 저항적 운동사의 과잉 :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주체들의 다원적 역동성’

이번 논의를 통하여 주목할 관심사는 한국의 근·현대사를 서술·평가하는 과정에서 교과서들이 보이고 있는 정치과잉적 운동사적 시각이다. 예를 들어 금성출판사 교과서에는 “민주주의의 시련과 발전”을 다루는 항목에서 독재자들과 이에 항거하는 민중들 간의 상호작용과 투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6·25전쟁이후 이승만 정부는 장기집권을 모색하였다. 이로 인해 독재정치와 부정부패를 불러일으켰고, 결국 4·19혁명으로 물러나게 되었다. (중략) 박정희는 3선 개헌과 10월 유신을 통해 장기집권과 권력의 강화를 꾀하였으나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거센 반발을 받았다. 결국, 박정희의 죽음으로 유신체제는 무너지고 민주정부수립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이 터져 나왔다. 그러나 신군부는 이를 무력으로 억누르고 권력을 장악하였다. 1980년대 중반 들어 군부정권의 통치에 대한 국민의 저항과 민주화요구는 갈수록 거세졌다. 그 결과 1987년 6월 민주화항쟁으로 권위주의적 통치체제는 무너지고, 한국사회는 점차 민주화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p. 276)

이러한 표현들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민주주의와 민주화에 대한 매우 단순하기 짝이 없는 일차원적 인식의 결과가 아닐 수 없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건국이후 줄곧 엄청난 시련과 도전을 받았다. 이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은 배타적으로 독재자의 권력욕과 권력의지로부터

비롯되는 것인가.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단순화의 오류’를 범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은 다차원적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선 외부의 침략세력으로부터 오는 도전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민주주의는 경제발전수준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경제발전 없이도 민주주의가 가능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또 경제발전을 정치적 민주주의의 필요조건으로 단언할 필요는 없을는지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특히 경제적 후진성과 절대적 빈곤이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는 점은 누구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문화적 요인들도 빼놓을 수 없다. 서구의 민주주의가 그 문화와 관습, 역사배경이 다른 나라에 이식되어 제도화 되는 데는 사람들의 인식도 변화해야한다. 이처럼 민주주의가 만개 하는 데는 수많은 조건들과 도전들이 엄존하고 있는데, 이 모든 요소들을 간과한 채 오로지 독재정권의 출현과 전횡만을 민주주의의 시련으로 접근하는 것은 민주주의라는 어젠다를 너무 단순하게 보기 때문이다.

해방이후의 혼란을 수습하고 정부는 수립되었지만, 대한민국은 어디까지나 신생국이고 약소국이며 분단국이었다(김일영 2005, 152). 대한민국은 신생국이었기에 국가건설과 국민형성이라는 과제에 직면했다. 한국은 약소국이었기에 국가의 생존을 지키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했다. 또 한국은 분단국이었기에 북한으로부터 끊임없는 도발을 받는 분단국의 비애와 명애를 짊어질 수밖에 없었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말할 때는 이러한 도전들에 봉착하면서 그 다차원적 도전들을 어떻게 극복하려는 노력을 했

는가하는 점을 다루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어젠다도 다루어야지, 그 모든 것들을 생략한 채 진공상태에서 작동하는 국가처럼 “독재나 민주냐”하는 이분법적 질문을 던지며 답변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문제설정 방식이다. 그런 단순한 문제설정은 학생들에게 마치 우리가 처음부터 안보나 경제적 요구가 비교적 충족된 유복한 국가공동체에 살고 있었던 것과 같은 착각을 심어주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교과서 서술에는 눈에 띄는 ‘부재’가 있다. 바로 미국과의 관계이다. 한미동맹에 관한 언급이 없는 것이다. 한국이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직면하여 생존전략의 차원에서 의미있는 동맹을 맺은 것은 1953년 휴전직후 미국과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탁월한 외교적 수완을 발휘하여 미국을 설득함으로써 이 조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한국은 이러한 안보동맹의 틀 안에서 1960년대 이후 경제발전과 1980년대 후반 이후의 정치발전, 즉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과연 미국의 도움 없이 광복 60년간의 한국의 성취, 즉 건국과 안보 및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오늘의 수준으로 이룩할 수 있었을까.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2세들을 위해 한국 민주주의의 복합적 성격을 가르쳐 주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한미동맹의 체결과 내용 및 의미를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조건과 관련해 일정부분 지면을 할애해야 온당하다고 생각한다. 혹은 적어도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내용의 일부를 자료로 제시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금성출판사교과서에는 한미동맹에 관한 내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민주화운동사의 관점에서 쓰여진 교과서에서 한미동맹에 관한 설명이 나오길 기대한다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와 같은 소

망일는지 모른다. 그러나 한국의 민주주의를 충실하게 설명하고자 하는 교과서라면, 한미동맹에 관한 내용이 일정부분 다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그런가하면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과 관련하여 민주화운동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서술방식에 주목해보자. 물론 민주세력의 민주화투쟁이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요소로 평가받는 것에 이의는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민주주의의 발전이 민주화투쟁을 중심으로 배타적으로 서술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을까. 교과서저자들은 이 문제와 관련,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준칙에 사로잡혀 있는 것인지 모른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제도를 통해서도 자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행위나 의식이 중요한가 아니면 제도가 중요한가하는 논쟁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논쟁이지만, 중요한 것은 제도와 행위는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사실로서 양자는 ‘인과관계’보다는 ‘순환관계’로 조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민주화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예증하는 것으로는 행위자의 행동 못지않게 제도들이다. 그럼에도 교과서서술에는 행위와 각종운동에 치중한 나머지 정당·국회·헌법·권리의 규정·법원·언론 등의 제도화문제들이 완전히 생략되었다. 하지만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올바른 서술이라면, 민주화투쟁 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민주주의 발전과정도 포함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두 번째로 운동사라고 하더라도 주로 저항적 민주화운동의 주류로 서술·평가되어있다는 점도 지적될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에서 일어나는 운동이라고 할 때 저항적 정치운동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상적 차원의 노고들도 있다. 문제는 교과서에서 저항적 운동에만

지면을 대폭 할애할 때 민주주의를 위한 일상적 노고는 어디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평가받는가 하는 의문을 야기한다는 점이다.

세 번째로 상기의 지적과 같은 맥락에서 민주화의 열망은 정치적 차원에서만 서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발전은 경제적·종교적·문화적·사회적·교육적·법적 요소들과 유기적이며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민주화를 정치적 행위의 운동으로만 접근할 경우의 문제점이라면, 정치적 행위이외의 다양한 인간행위의 역동성과 가치를 인정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이것은 대단히 좋지 못한 ‘환원주의(reductionism)’의 한 형태인 셈이다. 실상 민주주의를 정치운동사로 일관하고 있는 교과서들을 보면, “정치적 술어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시 한편 즐길 수 없고 애정행각도 벌일 수 없다”는 토마스 만(Thomas Mann)의 지적을 상기시키는 측면이 있다. 만일 교과서저자들이 토마스만처럼 생각한다면, 그러한 견해는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이 성적 표현”이라는 프로이트주의자들의 주장만큼이나 설득력을 결여하고 있는 셈이다. 정치적 삶과 행위가 인간의 삶에 중요한 삶의 방식이기는 하나, 다양한 삶의 방식을 관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 행위이외에도 문화·사회 등의 일상적 삶들이 우리 근·현대사에서 각자 그 독자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지 않은가.

한편, “사회변화와 사회문제”를 다루는 부분에서도 그 내용이 각종 운동으로 점철되어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다. 금성출판사 교과서의 관련되는 부분(p.332~341)을 보면, 산업화와 도시화의 전개에 따라 사람들의 물질적 정신적 사회적 삶의 조건이 어떻게 변해왔는가 하는 문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분량이 도

시민민운동에서부터 노동운동·시민민중운동·환경운동·노점상운동·민주화운동에 이르기까지 각종운동으로 채워지고 있다(이대근 2005, 121). 이러한 교과서저술의 특징은 시민생활의 일반적 운동은 없고 다만 정치성향의 저항적 운동만이 현저하다는 점이다. 특히 노동운동이나 민중운동에 대해서는 상세한 연표까지 만들어 붙이고 (p.337) 수많은 참고자료용 사진들이 등장한다.

그렇다면 현대의 사회변동과 관련하여 각종 운동사로 사회사를 채우고 있는 현상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사회사에는 운동사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가족·친족·촌락·교회·시장·기업등과 같은 사회의 영역과 주체들이 각기 역동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가운데 자신들이 전개한 삶의 역사는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운동사보다 훨씬 더 풍요하기 때문에 주목을 받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사실은 학생들에게 충분히 강조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운동사적 저술이 갖는 교육적 의미는 무엇일까. 학생들에게 운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하라는 메시지인가. 아니면 바람직한 민주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성향의 운동에 반드시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인가.

결국 한국의 현대사나 사회사가 운동사로 채워져 있다는 것은 『해방 전·후사의 인식』 이후 정치사·경제사·사회사·문화사·사상사의 제 반분야에서 나타난 새로운 연구 성과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 지성의 게으름과 한편으로 지선의 편식성을 반증하는 셈이 아니겠는가. 생각해보면, 근현대사 교과서가 노정하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은 문제의 저술에 참여한 역사학자들과 정치·경제·사회·문화·사상 등을 전공한 사회과학자들과의 학제적 교류가 경시되었던 탓에서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그것은 특히 근·현대사 교과서가 관련전공자

들을 배제한 채 전문분야에서 간접적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역사학자들만으로 집필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VI. 결어 : 건국과 산업화는 ‘에피소딕’한 사건이 아니라 ‘세만틱한’ 사건

요즈음 제7차 교육과정 개정작업이 한창이다. 이 과정에서 본 논의를 통해 지적하고 비판한 문제점들이 고쳐질 수 있을 것인가. 지금의 전망으로는 비관적이다. 그 비관적 전망의 한 사례를 들면, 지난 11월 22일 교육인적자원부가 현행고등학교 1학년 국사교과과정에 근·현대사교육을 대폭 강화할 목적으로 펴내 배포한 『근현대사 교수 학습자료』라고 하겠다. 이 학습 자료를 구해 검토·분석해 본 결과 문제의 자료역시 상기의 논의를 통하여 지적해온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확대·재생산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국 이처럼 ‘헌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고 있는’ 형국에 불과하다면, 특히 근현대사 교과서 개정작업은 크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의미가 된다. 보다 과학적이며 공정한 서술과 보다 심오한 문명사적 비전이 함유된 올바른 평가가 들어가기를 바라는 소망이 무산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자는 논의를 마감하면서 왜 한국교과서에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 현상이 팽배하고 ‘부친살해(patricide)’의 역사쓰기가 유행하게 되었을까하는 의문을 지울 길 없다. 또 정치 과잉의 운동사위주의 왜소한 역사쓰기가 일반화되었을까하는 점도 궁금하다. 물론 거기에는 원인이 없을 수 없다. 『해방 전후사인식』에서 기초가 되었던 ‘민주와 반민주’, ‘통일과 반통일’, ‘독재와 반독재’, 및 ‘친일과 반일’ 등의 단순한 이분법이 여전히 역사학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러한 단순한 이분

법에 몰입되어 분단단죄, 통일과잉주의가 팽배하다보니, 전 근대인에서 근대인으로, 유교국가에서 현대적 세속국가로, 빈곤에서 풍요화로, 혹은 특정한 인습적 가치에서 인류보편적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신유목민(neo-nomad)’으로서 한국인의 역동적이며 풍요로운 모습을 담는데 실패하고 있다. 우리는 광복 후 60년 동안 분단된 국가공동체로서 살아왔지만, 프랑스의 석학 자크 아탈리(Jacque Atalie)의 표현을 빌면, '신유목민'처럼 끈임 없이 선진가치를 찾아 방랑하면서 때로는 ‘정체성위기(identity crisis)’도 겪고 또 때로는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를 마다하지 않으며 살아왔다. 그러나 교과서들은 이러한 약동하는 삶의 모습을 온전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친일과 청산이 안 된 나라”, “반공독재가 횡행한 나라”에서 권력욕밖에 가진 것이 없는 독재자와 억압자 밑에서 구차한 삶을 살아온 것처럼 기술하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우리 사회에는 독재자와 싸우는 정치적 성향의 저항적 운동만 있고 ‘삶의 질’을 가꾸는 일상적 운동은 없으며, 목소리가 큰 ‘비판자’와 ‘저항자’들은 있되, 묵묵히 자신의 생활영역에서 충실히 일하는 ‘건설자’는 없었던 사회로 기술되고 있다.

또한 건국이나 부국화에 힘을 쏟은 지도자는 국가와 민족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한 ‘국가인(statesman)’이 아니라 찰나적인 정권욕과 권력의지에 사로잡혀 행동한 정략적이며 속물적 근성의 ‘정치인(politician)’으로 평가 절하된 나머지 교과서에서 제대로 된 독사진조차 한 장 없는 ‘비인간(nonperson)’이 되고 말았다. 이와 더불어 그들과 함께 나라를 건설하고 산업화를 이루는데 동참함으로써 한 몫을 담당하고 진력한 국민들까지 독재자 밑에서 순응한 수동적 시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온 역동적이고 풍요

로운 삶의 모습은 찾을 수 없는 교과서 서술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

그런가하면 교과서저자들이 ‘분단의 역사’에 과도하게 천착하다보니, 문명사적인 함의를 갖는 기념비적 사건들을 제대로 평가하는 안목을 가질 수 없었고, 그 결과 건국과 산업화, 및 민주화에 헌신한 역동적인 노력과 에너지가 분출하는 모습이 교과서에서 사라져 버렸다. 물론 운동사 중심의 서술이 그 자체로 부당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것은 계급운동의 시각처럼 정치·사회·문화의 변천을 설명하는 한 가지 방식으로서 개인용 논문이나 개인연구서적의 독특한 접근방식이 될 수 있겠으나, 제2세들에게 ‘한국인’이라는 자각을 심어주는 것을 주요기능으로 삼는 교과서에서 그런 특정방향으로 편향된 분석·평가방식을 원용한 것은 무지의 소치이거나 아니면 의도된 왜곡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저항적 운동사로 한국인의 민주주의에 대한 60년간의 열망에 대하여 포괄적인 설명을 피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민주화에 중요한 함의를 갖는 일반시민들의 일상적 노고가 의미 없는 사소한 범주로 평가절하 되고 있기 때문이다. 운동의 투쟁서술방식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교과서들을 보면 결국 2세들에게 ‘운동의 열정’으로 가득 찬 운동가가 되라는 강력한 권고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까 하는 의구심을 지울 길 없다.

한국사회는 미국사회처럼 ‘건국의 아버지’나 ‘부국의 아버지’를 가질 필요는 없을는지 모른다. 따라서 ‘이승만 국부론’이나 ‘박정희 신화’를 일부러 만들 이유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사실’과 ‘진실’은 옳곧게 기록되고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같은 맥락에서

‘영웅만들기’는 거부한다고 해도 선대의 사람들이 ‘건국의 공동체’와 ‘부국화의 공동체’에서 유기적인 한 부분을 이루며 치열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까지 부정하며 학생들에게 가난과 질곡, 저항, 억압 및 모순과 불평등속에서 힘겹게 살아왔다고 말해야 할 것인가.

본 논의에서는 교과서 저자들이 서술과정에서 취하고 있는 입장을 사자의 상황과 비교하여 은유적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사자는 삶의 풍요로움을 볼 수 없다. 사자의 눈에는 ‘잡아먹을 수 있는 것’과 ‘잡아먹을 수 없는 것’만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먹는 것이 아닌 이상, 가을 단풍의 아름다움이나 봄의 아지랑이를 감상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그런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없다면, 심미감이 결여된 불쌍한 존재가 아닐 수 없다. 교과서 저자들이야말로 바로 그러한 왜소한 지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가하는 생각이 든다. 교과서저자들에게 심미감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문명사적 지성의 흐름을 조망하는 안목이 부족한 것은 확실하다. 물론 교과서 지침을 내려준 교육인적자원부는 더 커다란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왜 분단과 통일이외엔 아무것도 보지 못하며, 친일파청산외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까. 또 통일지향이라고 해서 ‘북한식 사회주의’의 반인권적 상황에 관하여 의도적으로 침묵을 한다는 것이 반문명사적인 서술이라는 것을 왜 모르는가. 독재와 반공주의의 오남용은 마땅히 비판을 받아야 하겠지만, 대한민국이 이룩한 성취는 나름대로 문명사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충분한 평가를 받아야한다. 강조하거니와, 60년간의 우리생활은 역동적이었고 치열했다. 그런 모습은 어디가고 겨울나무의 ‘양상한 가지’처럼 왜소한 모습만 그려지고 있는가.

국가건설과 산업화 및 민주화의 과정에서 분출된 역동성과 열정, 및 에너지에 대한 회의감이나 허무감을 확산시키는 교과서, ‘분단의 역사’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원죄의식에 사로잡혀 반일, 반미, 反반공 민족주의를 과도하게 동원하고 ‘운동’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차 진실과 사실을 왜곡하는 교과서라면, 과연 그것이 2세 교육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과거의 ‘오르도독스’에 대한 ‘탈 성역화’가 과도하게 진행되면서 대한민국 공동체의 존재이유이며 헌법적 가치인 문명사적 가치들마저 폄하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유감이다. 그 결과 교과서저자들마저 ‘분단이데올로기’와 ‘통일이데올로기’에 함몰되어 대한민국 60년의 역사가운데 가장 중대한 의미를 갖는 세 가지 현상, 즉 ‘건국’과 ‘근대화’ 및 ‘민주화’가운데 ‘건국’과 ‘근대화’는 ‘에피소딕(episodic)’한 범주로 치부하고, ‘민주화’에 대해서만 ‘세만틱(semantic)’한 범주로 평가하는 나머지 ‘건국’과 ‘근대화’를 부정적 인식과 억제, 축소, 왜곡, 생략, 소외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그나마 민주화에 대한 접근도 편향되어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술방식은 잘못된 인식의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역사와 공동체의 자존을 보장받으려면, 또 우리가 광복 60년 동안 많은 고난과 역경의 시기를 맞이하였지만, 그때마다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예지와 용기를 가지고 극복했다는 사실을 후손들에게 들려주려면, ‘민주화’에 관한 이야기만으로는 부족하다. ‘건국’과 ‘근대화’를 위해 피와 땀을 흘린 사실과 진실도 엄숙한 목소리로 이야기해야 한다.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2세 교육을 위한 올바른 역사쓰기 정신이 살아 숨 쉰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일영 2005. “민주주의의 시련과 발전,” 교과서포럼편, 『한국현대사의 허구와 진실』. 서울: 두레시대.
- 신지호 2005. “북한의 역사전개과정과 남북관계,” 교과서포럼편, 『한국현대사의 허구와 진실』. 서울: 두레시대.
- 이대근 2005. “경제성장과 산업화.” 교과서포럼편, 『한국현대사의 허구와 진실』. 서울: 두레시대.
- 이영훈 2005 “중·고등학교사회과교과서에 그려진 한국경제의 모습” 교과서포럼 주최 제2차 심포지엄(4월29일) 『중·고등학교 경제관련교과서, 이대로 좋은가』에서의 발표논문.
- 전상인 2005. “광복과 대한민국건국과정,” 교과서포럼편, 『한국현대사의 허구와 진실』. 서울: 두레시대.

색간지

**전교조 교과서 왜곡과
무의식의 지배**

정 재 학(전남 삼호서중학교 교사)

전교조 교과서 왜곡과 무의식의 지배

정재학(전남 삼호서중학교 교사)

I. 들어가는 말

지금 전교조는 존립에 대한 국민적 저항과 노선 수정의 요구를 받으며 위기를 맞고 있다. 교원평가제 거부 이후 이수일 위원장이 사퇴하고, 이어 전교조가 집행부 구성을 못하고 대리체제로 계속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일 것이다.

한때 전교조는 학생을 ‘학생동지’라고 부를 만큼 색깔과 노선에서 혁명적인 적극성과 극렬성을 띠고 활동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참교육이라는 미명(美名)에 속아 정체를 모르고 있던, 일반 국민들이 전교조 정체에 의심을 품기 시작하고, 마침내 그동안 품문으로 들었던 친북좌익 교육이 APEC 자료와 같은 구체적인 것이라는 점을 깨닫고 대항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또한 자유교조가 설립되는 등 반전교조 전선(戰線)이 확산되고 있기에 그들은 지금 위기를 느끼고 있다.

따라서 지금 전교조는 미군철수 시위집회로 대표되는 적극적인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친북좌익운동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여론의 반전을 기다리며 잠복에 들어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岐路)에 서 있다.

아마도 붉은 꼬리를 접고, 국공합작 이후의 중국공산당처럼 잠시 휴지기를 두고 인민교육, 즉 학생들에 대한 좌익교육에만 전념하고 싶을 것이다. 미래의 사회주의자 즉 미래의 한총련과 극렬노조, 그리고 전교조 조합원을 양산키 위해 교육은 그만큼 중요하고 따라서 쉽 없이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동안 친북좌익 세력들은 전교조를 합법화시켜주고, 보안법 폐지나 사학법 개정과 같은 법개정을 통해 활동영역을 넓혀주는 등 전교조 활동을 위한 환경을 개선해 주고 있다. 연방제 통일이라는 목표를 위해 정권을 중심으로 전교조 비호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다만 반전교조 세력의 확산과 여론의 악화를 우려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반드시 이 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들을 막아야 한다.

전교조는 전교조 운동의 궤도에 변함없이 두 가지 주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노동운동과 친북좌익 교육이다.

전교조는 운동의 초창기에 ‘교사의 권익 보장과 사용자로부터의 보호’라는 노동운동의 달콤한 꿀을 통하여 회원수를 불리었고, 이 노동운동을 사회 전체로 확산시키기 위해 학생 그 중에도 실업계에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수와 회비, 정부의 전교조 지원금 약 200억을 가지고 친북좌익 교육에 전념하고 있는 것이 현 전교조 운동의 두 가지 흐름이라 할 것이다.

전교조의 친북좌익교육을 다루기 전에, 그들의 정체를 알 수 있는, 그들이 어떤 식의 노동운동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간단한 내용을 하나 들어본다.

다음은 전교조 충북지부에서 제작한 전교조 새내기 교육 자료이다. 그들이 신규교사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있는가. 교장교감을 사용자로 보고 교사들을 노동자로 생각하게 하는가. 그리하여 어떻게 신규교사를 전교조 안으로 끌어들이는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에는 ‘교장, 교감 선생님의 수업 관여’ 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 **교장, 교감선생님이 신규라고 수업에 불쑥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시 참관은 교사의 수업권에 대한 심한 모독이며, 그에 대한 규정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 20조 1항의 교장의 교사 지도 감독은 자신이 관리자로서 해야 할 일에 대한 지도 감독이기에 **교사의 고유 권한인 수업에 대해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교장이나 누구든지 교사의 수업을 참관하고자 한다면 교사의 사전 허가를 요합니다. 이는 교육의 주체인 교사(수업권)와 학생(학습권)의 권리를 존중하는 데 그 중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먼저 학교에서 교사들끼리 조직하여 불시 참관 불가함을 전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근거 제시를 요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수업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문을 잠그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혹 이

상한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반드시 전교조와 함께 하세요. 부당하기에 전교조는 그 근거를 가지고 함께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 전교조 새내기 교사 교육자료 증복지부 -

수업 참관은 학교장의 학교 관리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며, 이는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전교조는 이 부분을 숨기고 불시 참관만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이 불시참관의 불법성에 이어서 수업은 교사의 고유권한이므로 ‘학교장은 수업에 대해 관여할 수 없다’라고 확대하여 가르치고 있다. 웃기는 것은, 교사지도 감독은 관리자로서 해야 할 일에 대한 감독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동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는 이상한 분위기(학교장의 문책?)가 조성되면 전교조와 함께 행동하라고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왜 전교조가 교사로서의 품위를 잃고, 더구나 인간적인 모습마저 퇴색한 채 행동하고 있는가. 어른을 존경하지 않고 패륜적인 행동을 자행하는가.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선도해야 할 교사를 이런 식의 노동자로 만들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II. 전교조 친북좌익교육의 특징

이렇게 노동운동으로 끌어들이는 교사를 모아서, 전교조는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인 미군철수와 연방제 통일을 위해 친북좌익 교육을 시키고 ‘학생동지’ 양성에 들어간다. 그 특징으로,

● 공개화 된 의식화 교육

- 전교조 조합원 교육을 공개리에 하고 교육자체를 공개함으로써 교육의 정당성을 인정받고자 함
- 시위 집회를 통한 투쟁성 및 단체 행동의 합법성 교육 강화

● 무의식으로 침투하는 교육

- 시나 문학작품을 통한 정서적인 접근
- 통일사탕과 같은 물질을 이용하여 통일에 대한 달콤한 환상을 심어줌

● ‘자유민주’ 개념을 호도하여 이념의 무력화 시도

- 현 중학교 도덕 교과서에는 단 한 곳 6.10민중 항거에 ‘자유민주’ 라는 말이 있을 뿐임.
- 대한민국의 건국이념과 통일이념으로서 ‘자유민주’라는 표현이 사라짐.

1. 이념의 무력화

다음은 전교조 통일교육자료로서, ‘통일을 생각하는 서울교사모임’

이 통합교과적 학생주도형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염두에 두고 1998년에 교육부의 교과교육 연구 응모에 제출하여 당첨된 자료이다.

이 자료에는 통일을 위해서는 차이는 인정하되 서로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으나, 이것은 동족 간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념을 앞세워서 안 된다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이념을 무력화 시키는 교육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 차이와 차별의 학습이 왜 필요한가?

우리가 ‘차이, 차별, 평화공존’의 인식 틀을 통일교육과정의 새로운 접근으로 연구한 것은 그것이 ‘왕따’, ‘남녀차별’ 등 학생들의 현실 생활 속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통일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극복하여야 할 반 통일의식의 바탕에 관련된 문제이며, 또한 통일의 방법과 통일 후 우리의 삶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포함한 인식 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별을 극복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는 개인의 생활에서 바탕이 되는 인간 사랑의 기본 바탕이며, 이것이 우리 사회 문제에 적용될 때는 ‘차이를 존중하며 함께 생활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의 바탕이 되며, 남북통일의 문제에 적용될 때는 ‘남북 주민의 평화공존’의 바탕이 된다. 나아가 ‘차이와 차별, 평화공존’의 개념은 학생들의 생활상의 문제에서부터 비롯하여 중요한 사회적 갈등의 요소인 사회적 차별과 나아가 민족 간의 갈등, 같은 민족인 남북 간의 갈등의 문제 등을 이해하고 그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인식의 틀이 된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아닌 '남'은 바로 다른 민족이었는데, 지금의 우리 사회의 '남'은 바로 우리 내부의 바로 '나'(우리)라는 사실이라는 데에서 문제의식을 갖기 때문이다. 우리는 '외국인 노동자' 차별만이 아니라 소위 '구조조정'으로 쫓겨난 실업자들의 절망적인 삶을 통해서, 경제적 위기의 어려운 삶의 조건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의 삶을 아픔을 통해서 장차 통일 후의 북한 주민이 직면하게 될 차별과 희생의 강도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차별에는 지배와 통제를 합리화하는 이데올로기와 타자에 대한 오래된 고정관념과, 편견이 있으며, 뿐만 아니라 차별하는 집단의 이익을 지키려는 이기주의도 작용한다. 따라서 차별의 극복은 이러한 고정관념, 편견, 이기주의를 버리고, '차이'(다름)를 수용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남'(남한 주민에게서의 북한은 '남'이면서도 '우리'이다. 국제사회에서 '우리는 형제다'라면서 배고픔으로 꺼져 가는 어린 생명에 대해서는 '남'이다.) 이전에 '갈라진 우리'가 '어떻게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지'를 관심 갖게 하고, 그 해답을 찾게 하는 출발로 '차이와 차별, 평화공존'의 인식 틀을 선택한 것이다.

- 차이와 차별을 주제로 한 통일교육 -

2. 미군에 대한 적개심 고취

이렇게 민족공존을 이루기 위해 자유민주 이념과 같은 이데올로기

를 버리고 차별을 없애는 것이 통일을 위한 마음가짐이라고 가르친 뒤, 전교조는 자유민주 이념을 비운 머릿속에 학생들에게 미군에 대한 적개심을 넣어주는 것이다.

다음은 전교조 반전 교육자료에 실린, 이라크에서 사망한 김선일이 친구에게 보낸 메일 내용 일부이다.

(상략) 소름끼치는 미군의 만행을 담은 사진도 가지고 갈꺼다. 결코 나는 미국인 특히 부시와 럼즈펠드 미군의 만행을 잊지 못할 것 같다.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미국인에 대한 인상은 좋은 편이었는데, 여기 와서 다 허물어졌다. (중략) 이야기가 주절주절 길어졌네. 늘 평안하길 강건하길 바라고 선일이가....

- 반전평화계기수업자료집 중 김선일의 편지에서 -

‘소름끼치는 미군의 만행’

왜 전교조가 그토록 김선일을 추모했는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일 것이다. 당시 서해교전에 북한군의 총포를 맞고 숨진 우리 해군장병들은 위로금 3000만원을 받고, 김선일은 10억을 받았다. 이 기막힌 차이가 바로 전교조와 좌익세력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다음 글은, 이라크 파병 반대가 북한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 **북핵·이라크사태에서 교사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라크 다음은 북한?**

세계 평화와 우리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길에 교사들이 앞장서야 합니다.

전 세계적인 반전평화 흐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미국은 이라크를 침공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으며, 북한의 원자력 발전 지역을 폭격하는 계획을 수립하려 합니다. 북에 대한 핵 선제공격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북 핵 개발 의혹을 일으킨 후 말로는 평화적 해결을 내세우면서도 대화를 기피하고 **두 개의 전쟁 운운하는 등, 사실상 한반도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6.15 공동선언을 계기로 남북한 민중들이 이룬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중한 진전을 가로막는 행위로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참으로 미국은 남의 나라 민중의 생명과 행복은 안중에도 없는 제국주의적 본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라크 전쟁을 중단시키는 것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뇌관을 제거하는 일과 같습니다. 미국의 패권과 석유를 위한 이라크전쟁, 그리고 북핵을 빙자한 한반도 위기 조장과 한반도 침공을 막아내야 할 이 엄중한 시국에, 우리 교사들이 떨쳐 일어나 한 걸음을 보태야하겠습니다. (중략)

경남지부는 3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반전평화 경남교사선언을 조직합니다. 지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서명용지를 내려 받아 학교

동료 교사들의 서명을 받은 후 지부 Fax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언문은 전국적으로 취합하여 인터넷 통신과의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발표할 것입니다.

- 부시와 블레어는 오만과 무지와 편견에서 벗어나 세계 민중의 뜻에 따라 이라크 전쟁 책동을 즉각 중단하고 평화적 협상에 임하라!
- 미국은 한반도 전쟁 음모를 중단하고, 북한과 협상하여 불가침 조약과 핵동결로 일괄 타결하라!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

전교조는 북을 보호하고 통일을 앞장서는 일에 노동자 농민의 민중운동을 확대하고, 교사도 이에 동참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민중혁명으로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즉 노동자농민들과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번 WTO 홍콩 불법 시위집회에도 모두 13명의 전교조 교사를 파견하여 시위집회를 폭력으로 이끌어갔다.

이처럼 노동자 민중에게 주어진 하나의 관건적인 과제는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독자성을 어떻게 여하히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반신자유주의연대전선의 확대와 강화의 의미를 다시 만나게 된다. 저들의 허구적 정쟁을 파탄내고 기만의 가면을 벗기기 위해서는 언론개혁이냐 아니냐, NLL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저들의 논쟁구도 보다도 오히려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이 중심이 되어 신자유주의 개혁의 허구성과 반민중성을 총체**

적으로 폭로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건강보험의 국민부담 증가와 공공의료기관의 민영화에 맞선 반대투쟁의 형성과, 파탄난 교육의 공공성 확대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분쇄를 위해 전체 민중의 연대가 그만큼 절실해 보인다. 반신자유주의 연대전선의 전국적 전민중적 확대만이 오늘날의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 진보교육 10-33 기고글 -

다음은 전남전교조에서 만든 반미를 위한 수업지도안이다. 전교조 교육의 현실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자료일 것이다.

▶ 미군 여중생 살인사건에 대한 공동수업 지도안

- 전교조 전남지부 참교육실천위원회 제공 -

| 학습 주제 | 미군의 여중생 살인사건에 대하여 생각해보기 | 학습모 형 | 탐구 및 발표학습 |
|----------|---|----------|--------------|
| 학습 목표 | 1) 우리나라에 미군이 주둔하게된 역사적 배경을 말할 수 있다. 2) 미군의 여중생 살인 사건에 대한 사실을 말할 수 있다. 3) 미군 범죄 처벌 규정의 문제점을 말할 수 있다. 4) 미군주둔과 미군범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다. | | |

| 단계 | 교수 - 학습 활동 | | 학습 자료 및 유의점 | 시간 | |
|--------|--|--|---|--|-----|
| | 교사 | 학생 | | | |
| 도 입 | <input type="checkbox"/> 학습분위기 조성 <input type="checkbox"/> 본시학습 소개 <input type="checkbox"/> 학습목표 제시 | -인사 및 출석 확인 -본시에 학습할 내용을 소개한다. -본시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 | -인사 및 환경 정비 -경청한다. -학습 목표를 확인하다. | -미리 패도를 칠판에 부착한다. -패도 | 5분 |
| 전 개 | <input type="checkbox"/> 주의환기 및 동기유발 <input type="checkbox"/> 소주제 1) <input type="checkbox"/> 소주제 2) | -지구상에서 가장 강성한 군사력을 갖춘 나라는? -미군이 가장 오랫동안 주둔하고 있는 나라와 기간은? - 우리나라에 미국군인이 주둔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배부한 자료를 숙독하고 발표하도록 한다. (학습자료 1,2) -미진한 부분은 교사가 보충설명을 해준다. -미군의 여중생 살인사건에 대한 진위를 배부한 자료를 숙독하고 발표하도록 한다. (학습자료 3) (http://www.antimigun.org에 접속하여 '사건의 진실' 동영상 또는 http://cafe.daum.net/edutongil '억울한 죽음' '인천방송 시대공감' 동영상 보기) -미진한 부분은 교사가 보충설명을 해준다. | - 학생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발표한다. 정답에 연연하지 않도록 한다. -지명된 모둠은 모둠원 중에서 발표를 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경청한다. -자신의 생각과 비교해보고 질문하거나, 발표한다. -발표한 모둠은 질문에 대답하거나 보충 설명한다. -지명된 모둠은 모둠원 중에서 발표를 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경청한다. -자신의 생각과 비교해보고 질문하거나, 발표한다. -발표한 모둠은 질문에 대답하거나 보충 설명한다. | -조를 조직하고, 조별로 잘 협의하여 발표하도록 주의시킨다. (발표자는 큰 소리로 발표할 것. 나머지 학생은 경청하며 비판하거나, 궁금한 점을 메모할 것) -교단 선진화 장비 활용 -교단 선진화 장비를 미리 켜서 점검을 해 놓는다. | 35분 |

| 단계 | 교수 - 학습 활동 | | 학습 자료 및 유의점 | 시간 |
|--|--|---|---|-----|
| | 교사 | 학생 | | |
| 전 개 | <input type="checkbox"/> 소주제3) - 미군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의 문제점을 배부된 자료를 숙독하고 발표하도록 한다. (학습자료4,5) -미군범죄에 대한 재판권행사가 낮은 이유를 생각해보도록 지도한다. -미진한 부분은 교사가 보충설명을 해준다. | -지명된 모둠은 모둠원 중에서 발표를 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경청한다. -자신의 생각과 비교해보고 질문하거나, 발표한다. -발표한 모둠은 질문에 대답하거나 보충 설명한다. | -멀티기자체 사용 (해당 사진이나 그림, 도표 등을 모니터에 출사한다) | |
| | <input type="checkbox"/> 소주제4) - 미군주둔과 미군범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도록 한다.(자주권의 소중함) (학습자료6,7) -정답(?)에 얽매이지 말고 미군주둔이나 그에 따른 미군들의 범죄에 대하여 해결방안이나 예방책 등을 자유롭게 발표하도록 유도한다. | -지명된 모둠은 모둠원 중에서 발표를 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경청한다. -자신의 생각과 비교해보고 질문하거나, 발표한다. -발표한 모둠은 질문에 대답하거나 보충 설명한다. | | |
| 정 리 | <input type="checkbox"/> 소감발표 -미군의 여중생 살인사건에 대한 수업을 하면서 느낀 점을 말하게 한다. (http://www.antimigun.org 에 접속하여 동영상 이용하기) | -각자 느낀 점을 정리해보고 자발적으로 하거나 지명된 학생이 발표한다. | 발표분 위기가 안되면 각자 노트에 정리하도록 한다. | 10분 |
| <input type="checkbox"/> 추모의식 <input type="checkbox"/> 차시예고 | - 미군에 의해 무참하게 압살당한 우리의 친구 여중생을 위한 추모의식을 제안한다. (http://www.antimigun.org 에 접속하여 추모하기) | - 추모의식에 참여할 학생은 조용히 묵념과 함께 그들의 영혼을 위한 간단한 의식을 갖도록 한다. | | |

● **참고자료(출처)**

1. <http://www.antimigun.org>
2. <http://www.ohmynews.com> /2002/08/04일자, 권박효원 기자
10zzung@ohmynews.com
3. <http://www.daum.net> > 기획/특집 > 여중생 사망사건 2탄,
SOFA 무엇이 문제인가? (2002/08/13)

● **공동수업 진행시에 참고사항(교사용)**

- 소주제1) 우리나라에 미국 군인이 주둔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말할 수 있다.

1945년 해방이후에 미국의 제의로 38선이 그어지고 남북분단의 씨앗을 심었다. 학습자료 1,2)에서 보다시피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은 아주 저급하고 이기적이고 비민주적이며 폭력적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일제하의 조선을 해방하는 군대가 아닌 점령군이었음을 스스로 선언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게다가 일제에 빌붙어서 부귀영화를 누렸던 친일민족반역자세력을 이용하여 미군정을 유지해나가고 있음에 주목하여야 한다. 그 점이 우리 현대사의 가장 큰 문제점이고 지금도 민족모순의 시발점임과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아울러 미군이 세계에서 최장기간 동안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호령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 소주제 2) 미군의 여중생 살인사건에 대한 진위를 말할 수 있다.

여건이 허용되는 교실은 <http://www.antimigun.org> 나 <http://voiceofpeople.org>에 접속하여 ‘사건의 진실’이라는 동영상을 시청하게 되면 어느 정도 사건의 가닥과 문제점이 보인다. 소요시간은 11분 정도 된다. 여건이 안 되는 교실은 학생용 자료에 시청각 자료를 많이 게재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 소주제 3) 미군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의 문제점을 말할 수 있다.

교사용 자료에 들어있는 지난 10년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미군 범죄사건을 파워포인트로 정리하여 보여주거나 학생용자료 5)의 도표를 크게 확대하여 칠판이나 모니터에 제시하도록 한다.

특히 학생용자료 5)는 미군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우리나라의 재판권 행사가 아주 미약하다는 통계 자료이므로 학생들의 도표 분석력과 자료이해력을 높이면서 미군범죄의 심각성과 그에 대한 문제해결력을 기르는데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 소주제 4) 미군주둔과 미군범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다.

해방이후 우리민족의 최대과제는 크게 2가지 정도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는 자주적인 통일민족국가를 수립하는 것이다. 즉 미국이나 소련 등의 외세의 간섭과 지배를 떨쳐내고서 스스로 남북한 분단국가가 아닌 통일민족국가를 만드는 과제가 최우선이었다.

둘째는 봉건적인 의식이나 제도, 풍습을 과감하게 개혁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공평하며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을 둔 자유와 평등,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땅에는 외국군대가 버젓이 머물면서 온갖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전혀 개의치 않고 심지어 왜곡하고 무시하는 자세를 아주 자랑스럽게 60여년을 행사하고 있다.

4번째 소주제에 이르기 위한 자료는 학습자료 6,7) 이외에 <http://www.antimigun.org>의 동영상자료에 ‘미선이, 효순이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다. 약5분 정도 소요된다.

- 정리단계

미군의 여중생 살인사건에 대한 수업을 하면서 느낀 점을 말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한 경우가 있을 때는 발표를 강요하지 말고 차분하게 공책에 자신의 감정을 적어보도록 하고 수행평가에 반영해본다.

그리고 미군에 의해 무참하게 암살당한 우리의 친구 여중생을 위한 추모의식을 제안하면서 <http://www.antimigun.org> 에 접속하여 ‘효순이 미선이 온라인 추모제’에 참가하고 현화하며 조문글을 올리고 서명하거나 ‘백악관에 항의메일보내기’ ‘모금운동’ 등에 참여하도록 안내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다.

【첨부1】 도덕 국사 교과서에 나타난 자유민주 개념의 호도

현 중학교 교과서는 통일교육이라는 부분을 따로 단원을 만들어 다루고 있다. 대부분 6.15 남북공동선언에 나타난 자주통일을 주제로 남북의 화해와 협력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자주통일의 저변에는 외세배척이라는 항목이 반드시 들어있고, 반미정서를 부추기고 나아가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공산주의와 자유민주 세계의 대립이라는 역사적 흐름에 균형 잡힌 생각이 아닌 것이다. 이를 요약하면, 평화 자주통일을 위해서는 외세를 배척해야 하고 외세를 배척하기 위해서는 미군철수를 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반미정서를 고취시키는 일환으로, 중2 도덕교과서 276P 에는 신라의 삼국통일을 소개하면서 ‘통일신라는 고구려 백제 유민들과 합심하여 당나라를 무찔러 이룩되었다’고 소개하여 민족의 단결과 단결을 통한 외세에 대한 저항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므로 p.277에서 ‘상대방과의 긴장과 갈등을 해소하고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서 p.284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표현이 있다. ‘우리도 이제는 북한을 적대적인 상대로 인식하거나 북한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노출시켜 강조하는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

일견 타당한 것 같지만, 여기에는 자유민주 체제에 대한 명확한 표현과 확신성이 없다. 통일의 정당성과 반미정서에 대한 의도적인

표현을 한 것 외에는 어디에도 자유대한민국에 대한 수호의지를 보여주는 표현이 없는 것이다. 이것은 김정일 체제로의 통일이라는 가능성도 있음을 내포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중학교 도덕이나 국사책 어디에도 '자유민주'라는 표현이 없으나, 오직 국사책 p.325 학습정리 란에는 '6월 민주 항쟁은 군사독재와 비리에 항거하고 자유 민주주의 정착에 크게 정착되어 가고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동안 반공을 국시(國是)로 내세워 자유민주를 지키고 발전해 온 근대역사를 통틀어 군사독재로 몰아붙이고, 온갖 비리가 횡행한 시대로 묘사하면서, 이에 대항한 6월 항쟁만이 유일한 자유 민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민주'라는 개념은 오직 군사독재와 싸운 민중항쟁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공산당과 싸워온 정권은 자유민주 세력이 아니라는 표현의 다름이 아니다. 더 가증스러운 것은 군사독재와 보수우익을 일치시켜 우익세력들을 자유민주를 거부하는 수구집단으로 인식시키고 있는 것이다. 자유민주에 대한 개념의 혼란을 노린 것이다.

그리고 심화과정으로 뒷면에

- 1) 대학교수단 시국 선언문
- 2) 5.16 군사 정변 때 발표한 '혁명공약'
- 3) 6.29 민주화 선언을 실고 있다.

5.16군사혁명을 기점으로 사회혼란이 수습되고, 이어 경제발전을 향한 힘찬 약진에 대한 공과를 묻어버리고 오직 끝부분 민주화 투쟁만을 정당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념적 혼란을 시도하고 난 뒤, 중2 도덕 p.274에서는 북한에 찬양의 글을 다음과 같이 실고 있다.

▶ **북한의 교예는 서양의 서커스를 추종하기 보다는 민족적 형식을 비교적 충실하게 발전시키고 있다.**

기예의 독창적이라는 말보다는 민족적 형식의 충실이라는 북한 주체사상 쪽으로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첨부2】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정서적 접근과 무의식의 지배

도덕 교과서와 국사 교과서가 반미정서를 부추기고 이념에 대한 혼란을 의도하고 있다면, 국어교과서는 정서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중학교 3학년 1학기 p.234에 신경림의 ‘봄은’이라는 시를 보면, 통일은 외세를 배척하는 곳에 있으며, 민족공존과 자주통일이 민족해방(봄)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문학이 학생들에게 순화된 정서를 심어주고, 나아가 가치 있는 삶을 영위케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신경림의 시는 엄청난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이런 정서적인 접근을 통해 학생들은 외세 배척이라는 통일의를 깊게 간직하게 될 것이며, 전교조의 미군철수 운동을 정당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런 정서란 것은 잠재의식으로 스며들어 가치관과 인생관 정립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그리고 행동으로 표출될 때는 확고한 신념으로 나타나는 법이다.

지금 어린학생들이 폭탄을 들고 미군 속으로 뛰어들겠다는 것도 모두 이런 교육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봄은

남해에서도 북녘에서도 오지 않는다.

(중략)

겨울은,

바다와 대륙 밖에서

그 매서운 눈보라 몰고 왔지만

이제 올

너그러운 봄은, 삼천리 마을마다

우리들 가슴 속에서 움트리라.

(하략)

- 신경림의 <봄은> 중에서 -

좌익정권의 의도를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예가 중3 국어에 나타난다. 우리 문학사는 1920년대에 등장한 카프(KAPF: Korean Artist Proleta Federation)를 지적하고 있다. 바로 경향시라는 표현으로 한 시대를 풍미한 문학임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이 카프문학은 ‘모든 예술은 사상의 도구여야 한다’는 사회주의 혁명론에 기초한 경향으로서 민중에 대한 선동과 가진 자에 대한 적개심을 도구 삼아 사회혼란을 부추기는 것으로 인해, 문학적 천박성으로 인해 많은 예술인들의 비협조와 탈퇴로 인하여 실패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예술이 사상의 도구로 전락하여야 한다는 억지에 동조하지 못하는 많은 시인들은 후에 순수시적 경향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한국의 경향시, 즉 카프문학은 실패로 끝났다고 우리는 믿고 있었으며, 7차 교육과정 이전의 교과서는 또 그렇게 기술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정부가 만들어 놓은 중3 1학기 국어교과서 p.215에 실린 카프에 대한 표현은 이렇다.

▶ 1920년대 중반에는 경향시가 등장한다. 경향시는 후에 선동시로 빠지기는 했으나, 시인의식을 정치 투쟁 의지에까지 연결시켜 시의 기능을 확대했다.

선동시로 빠지기는 했으나, 시인의식을 정치투쟁 의지까지 기능을 확대했다? 마치 정치 투쟁을 장려하는 표현이다. 그리고 정치 투쟁

을 당연시하고 나아가 시인은 정치투쟁을 해야 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치투쟁을 기능을 확대한 공로로 인정하는 듯한 긍정적인 표현은 여러 가지 복선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시의 기능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면, 시에 있어서 시가 갖는 여러 가지 기능 속에서 사회적 기능, 즉 시가 국민 대중에게 끼치는 영향만을 고려한 표현이기 때문이다.

결국 ‘예술은 사상의 도구’라는 정치사상적 기능으로서 보는 1920년대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추구하는 생각을 반복한 것이다. 더구나 공로로 인정하는 표현을 보면, 지금 국정교과서를 만든 좌익 정권의 의도를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좌익독립운동가를 독립유공자로 인정하고, 남과간첩을 통일의 역군이라 주장하는 것. 더구나 전교조를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카프에 전념한 사회주의 문인들을 위와 같이 공로자로 인정하고픈 의도라 할 것이다.

찬란한 새 시대의 향연(饗宴) 가운데서
우리는 향그런 방향(芳香) 우에
화염같이 붉은 한 잔 포도주를 요구한다

새벽 공격의 긴 의논이 끝난 뒤 야영은
뺏속까지 취해야 하지 않느냐

명령일하(命令一下)

승리란 싸움이 부르는 영원한 진리다
그러나 나는 또한 패배를 후회하지 않는다
승패란 자고로 싸움의 어찌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피로하지 않는 것이다
적에 대한 미움을 늦추지 않는 것이다
멸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지혜 때문에 용기를 잃지 않는 것이다

최후의 결별에 임하여 무엇 때문에
한 그릇 냉수로 흥분을 식힐 필요가 있느냐
벗들아! 결코 위로의 노래에
귀를 기울여서는 아니된다

- 임화의 <한 잔 포도주를> 중에서 -

Ⅲ. 맺는 말

작년 가을, 전교조는 학생들에게 통일사탕을 나눠준 적이 있다. 나는 그 의도를 파악하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통일사탕이란, 다름이 아니고 북한식 김정일 통치법과 일치한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 유치원을 본 적이 있다. 어린 유아들이 사탕을 들고 김정일 초상화에 고개를 주억거리며 ‘김정일 원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외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 생소한 광경을 떠올려 보았다. 달콤한 사탕을 주시는 아버지 수령. 입안 가득히 번지는 사탕의 달콤함과 김정일에 대한 달콤한 이미지.

바로 무의식을 지배하는 교육이었다. 용천 폭발 사건이 있었다. 폭발이라는 아주 짧은 찰나에도 주민들은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부터 대피시켰다고. 어떤 이는 그 초상화를 안고 죽어 있었다고. 모두 무의식이 지시한 행동일 것이다.

나는 통일사탕이 사탕의 달콤함을 통해서 통일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정체모를 환상을 심어주고자 하는 전교조의 의도라고 단언하고 있다.

사탕을 물고 다니는 철없는 우리 아이들에게 “너, ‘김정일 수령님 감사합니다’ 하고 해 봐.”라고 했더니, “싫다.”고 도망치는 아이에게서, 나는 전교조 교육의 실패를 감지하고 있다. 진실은 끝까지 속일 수 없고, 거짓은 학생들의 맑은 영혼까지 더럽힐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 교육은 교육의 순수를 잃고 사회주의 혁명론자들, 다시 말하면 전교조를 비롯한 적화세력들에 의해 학생동지를 만드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학부모를 동원하여 참교육학부모회를 만들어 전교조 배후세력으로 양성하고, 심지어 전국적인 학생회 조직을 만들어 전교조와 사상과 행동을 함께 하는 학생단체까지 만들어졌다.

교과서를 조작하여, 학생들이 무의식 속에 반미친북좌익 사상을 심어주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 자유대한의 위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끝으로 이런 교육을 받고 난 학생들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어느 초등생이 쓴 글 한 편을 소개한다.

▶ 제목 : 통일지우개

(전교조계시판에서 아이디 ‘봄바람님’이 제시한 것으로, 전교조 교육의 영향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어느 초등생의 글짓기이다.)

미국과 일본 나쁜 놈들이

우리를 갈라 놓았다.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싸인펜으로 찌지지지지지

우리는 오해해서 전쟁을 치렀다.

우리는 하지만 통하지 않는다.

우리는 천하무적

지우개로 쓱싹쓱싹

혼자서는 싸인펜을 못지우지만

우리가 같이 지우면

휴전선도 없어진다.

평양과 서울을 버스로 붐붐~

색간지

**우리나라 교과서 검정 및 채택
체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이 명 희(공주대 교수)

우리나라 교과서 검정 및 채택 체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이명희(공주대 교수)

I. 우리나라의 교과서 개발 체제에 대한 검토

가. 우리나라 교과서 개발 체제의 변천과 문제점

우리나라는 학교교육을 중앙정부가 강력하게 통제하고 지원하는 체제를 가지고 있다. 즉 우리나라는 ‘교육과정 구성 - 교재 개발 - 교수·학습의 적용 - 교육 평가 실시’라는 교육의 주요 프로세스 중에서 교육과정, 교재 개발, 평가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교과서를 자유롭게 발행하여 사용한 때¹⁾도 있었으나 국정제와 검정제를 근간으로 국가가 교과서에 강력하게 개입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국가 혹은 중앙정부가 의무교육기의 교과서 등 교재에 대하여 인정이나 검정 등의 여과장치를 통하여 관여하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우리나라처럼 의무교육 후

1) 우리나라에서 교과서 제도에 있어서 자유 발행은 두 번 허용된 적이 있었다. 개화기에 미처 근대적인 교육제도가 확립되기 이전에 교과서를 자유롭게 발행하여 사용할 수 있었고, 미군정기 초기에 역시 교과서를 자유롭게 발행하여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교과서 자유 발행제도가 있었다고 하기보다는 교과서제도가 국가적으로 확립되기 이전에 임시적으로 자유롭게 발행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기 과정에 대해서도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교재를 직접개발하거나 검정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다. 다음은 세계 여러 나라의 교과서 발행제도를 분류한 것이다.

【표 1】 세계 각국의 교과서 발행 제도

| 구 분 | 국 가 |
|-------------|----------------------------------|
| 자유발행제 | 영국, 스웨덴, 덴마크, 네델란드,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
| 인정제 | 미국, 프랑스, 호주, 이탈리아, 캐나다, 벨기에 등 |
| 검정제 | 독일,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이스라엘 |
| 국정제 | 북한, 필리핀, 핀란드 |
| 검정·인정 병용 | 스페인, 러시아 |
| 국정·검정·인정 병용 | 한국, 일본, 멕시코 |

[출전 : 한국교과서연구원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2종 교과용 도서 검정체제 개선 연구』 1999년, p.28참조.]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정부가 교육의 과정(科程)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며, 특히 교과서의 개발과 선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1949년 교육법에서 초·중등학교의 교과서를 국정 혹은 검인정으로 발행할 것임을 명문화 하였다. 그리고 1955년에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이 제정되었고, 이때 국정교과서에 해당하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문교부의 편수실에서 직접 교과용 도서를 개발하였다. 1950년대 말에는 검인정 교과서의 발행이 확대되었고, 1963년에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교과서 집필상의 유의점이 마련되고, 검인정 교과서의 편찬과 검인정 절차가 마련되었다. 1960년대 제3공화국 이후에는 대체로 국정제가 강화되는 쪽으로 변화하였다. 1977년 ‘교과서 과동’²⁾을 거치면서 문교부가 저작권을 가지는 1종과 문교부 장

관의 인정을 받는 도서로서의 제2종 교과서로 구분되었다. 국민학교, 중학교, 실업고등학교의 전 교과와 인문계 고등학교의 국어, 국민윤리, 국사 등 이른바 국책 교과가 제1종으로 개발되고, 기타 교과는 제2종으로 개발되었다. 이때 1종도서는 그 발행을 문교부가 직접 담당하지 않고 연구기관과 대학에 위촉하여 개발하는 형식을 도입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종도서와 2종도서 이외에 인정도서가 있는데, 이는 교육감 또는 교육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도서로서 초등학교 3학년의 지역교재와 선택과목인 환경교과서 그리고 고등학교의 교양과목인 철학, 논리, 종교 등의 교과서가 여기에 해당된다.

우리나라 교과서 개발의 역사에서 1998년은 특기할 만하다. 1998년 1월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설립되어 교육부로부터 중등학교 국사교과서를 제외한 제1종 교과서의 개발을 위임받게 되었고(1999년 5월), 제2종 교과서의 검정관리업무를 위탁받아(1998년 1월) 전문연구개발기관으로서 교과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현지점에서 교과서 전문연구개발기관에 의한 1종 교과서의 개발과 2종 교과서의 검인정을 수행하는 교과서 개발 체제에 대한 평가를 하기에는 이르지만 교과서 개발 및 검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경험과 방법이 축적되어 계승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었다는 점은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 1977년 3월 16일에 일어난 검인정교과서 공급을 둘러싼 부정과 비리 사건으로 관련 문교부 관리와 출판업자는 구속되고, 검인정교과서(주)는 거액의 탈세액을 추징당했다. 이로 인하여 교과서 출판업자는 대부분 파산하고 검인정교과서의 생산·공급 업무는 국정교과서(주)로 넘겨졌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과서 개발 체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일반적으로 지적되고 있다³⁾.

첫째, 교과서 발행에 관한 모든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고, 심지어는 교과서의 조직, 구성, 판형, 색도, 쪽수에 관한 사항까지 교육부가 일괄적으로 관장하여 교과서 체제나 내용구성방식이 획일적이다.

둘째, 교과서의 개발이 교육과정의 개정에 맞추어 전 교과목이 일시에 전면 개편되기 때문에 교과서 개발 및 검정에 관한 업무가 폭주하고 충분한 검토와 검증을 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셋째, 제7차 교육과정 기까지도 우리나라의 교과서는 학부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교육 재정 형편 등이 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며, 교과서 발행 출판사의 과당 경쟁 방지도 추구하면서 저 가격 체제 하에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넷째, 국가의 강력한 통제를 통해 교과서의 질을 확보·향상시키려는 입장에서 교과서 정책이 수행되고 있어서 민간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교과서에 반영되기 어렵다.

3) 한국교육개발원 『교과서 정책과 내용 구성 방식 국제비교 연구』 1995년, 11쪽 참조.
이명희 「제7차 교육과정기 교과서 체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2002년, 역사학대회 발표 자료집 참조.

나. 7차 교육과정기의 교과서상과 교과서 개발 방향에 대한 검토

우리나라에서 교과서는 공식적으로는 교육과정(curriculum)의 목표와 내용을 구체화시켜 놓은 국가 인정의 공식적인 교재이다. 그러나 실제 있어서는 교육과정보다는 교과서가 개별 교과와 교수·학습 과정을 이끌어 가는 교육 내용과 방법의 상징체로서 기능을 한다.⁴⁾ 이것은 아마도 우리나라의 학교교육에서 교수-학습 및 평가가 교육과정보다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학교 문화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 교과서는 국가의 교육정책을 비롯하여 교육철학과 교과관 그리고 교수-학습 방법론과 평가관 나아가서는 교육 현실을 총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실체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교과서 개발의 기본 방향을 결정 짓는 교육과정을 1997년 12월에 고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1998년 10월에 ‘교육비전 2002 : 새학교 문화 창조’라는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거기에서 한국교육이 나가야 할 장기적 방향을 ‘자기주도적 인간의 육성’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1997년 12월에 고시한 제7차 교육과정의 정신을 학교교육 운영에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교과서 개발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즉 첫째, 교과서는 사회변동의 새로운 양상을 반영해서,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 사회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둘째, 교과서는 ‘교육의 목표 → 교육 내용 → 교수·학습 방법 → 평가’로 이어지는 교육의 과정을 선도할 수 있어야 한다.⁵⁾

4)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과서 모형 개발 연구』 1998년, 33쪽 참조.

5) 앞의 책, 48-49쪽 참조.

또한 7차 교육과정의 지향하는 교과서 상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요약하여 설정하고 있다⁶⁾.

- ①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교과서
- ② 수준별 차이를 반영하는 교과서
- ③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교과서
- ④ 학습 내용과 방법 및 평가를 연결시키는 교과서

교육이나 교과서는 국가 및 사회의 특수성을 밀접하게 반영하는데, 이상에서 제안하고 있는 7차 교육과정 교과서 개발의 방향이나 교과서상에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서 100년 혹은 200년에 걸쳐 이룩한 산업화 및 민주화의 과정을 약 50년에 걸친 기간에 압축적으로 경험하였다. 게다가 통일된 민족국가를 이룩하지 못하고 아직도 분단된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특수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정책이나 평준화 문제와 같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비롯하여 북한의 인권문제나 이라크 파병문제 등 외교문제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이 크게 양분된 의견을 가지고 대립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국가 권력이 시스템 속에서 엄격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집단적 이기주의나 지역주의 그리고 담당자의 편의에 따라 임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6) 앞의 책, 51-55쪽.

예를 들면,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적 도청 사건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개발 등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우리 사회의 특수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적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즉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개발에 있어서도 국민통합을 위한 배려나 국가기관의 권한 남용이나 불공정에 대한 견제 장치가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7차 교육과정의 교과서 개발 방향이나 교과서 상의 제안에 있어서는 이러한 노력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

II. 검정 체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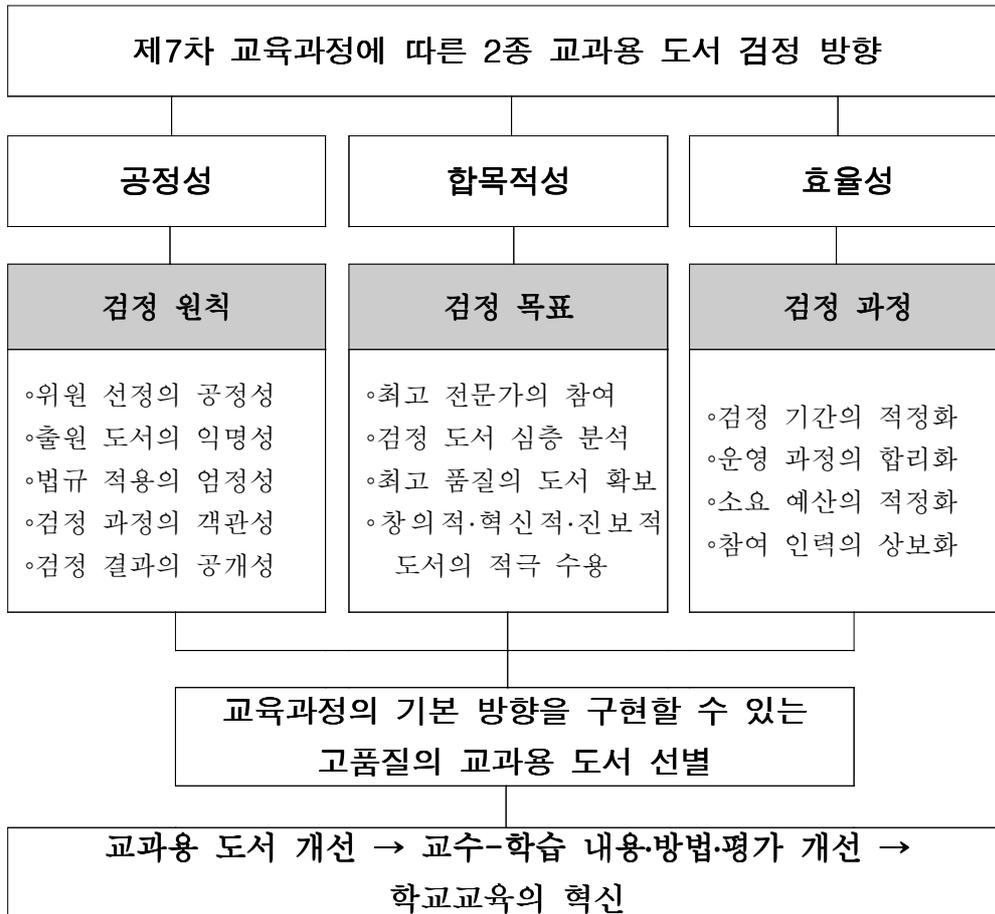
가. 우리나라 현행 교과서 검정체제의 특징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가 공동 주관하여 실시하는 교과용 도서의 검정은 다음과 같은 취지와 방향 하에서 실시하고 있다. 교과용 도서 검인정 제도는 이념적으로는 교과서 국정제와 자유 발행제의 장점을 모두 살리려고 하는 제도이다. 즉 민간 부분에서 여러 저작자가 자유롭게 개발한 교과서 중에서 우수한 상품만을 골라 시장 경쟁에 맡기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과용 도서 검정의 핵심적 내용은 우수한 교과서를 선별해 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유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자유로운 상품의 공급과 수요의 선택에 의해 상품의 생산과 소비가 운영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공성이 강한 상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그 품질 검사를 하여 양질의 상품만이 유통할 수 있도록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교과용 도서의 검정도 정부가 특정 이데올로기를 배경으로 민간의 자발성과 경쟁을 제한하는 데 주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 시장에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양질의 상품만 공급되고 유통되도록 하려는 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제7차 교과용 도서 검정 업무는 양질의 교과용 도서를 선별하여 기존 교과서의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는 합목적성, 검정 참여자의 이해관계나 편견 및 우연성 등을 초월하여 최선의

판정을 할 수 있도록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심의하는 공정성, 최소 비용-최대효용 원칙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는 효율성을 검정실시의 기본 3대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과용 도서 검정의 방향을 그림으로 정리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⁷⁾



[그림 1] 제7차 교과용 도서의 검정 방향

7)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2종 교과용 도서 검정 편람. 2000년, 4쪽.

또한 이상과 같은 검정제의 취지와 방향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여 하에 검정을 실시하고 있다.⁸⁾

첫째, 제7차 교육과정의 취지를 살리면서 단계별·연차적 검정을 도입하고 있다.

둘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내에 검정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2종 교과용 도서 검정기준’을 직접 연구·개발하여 검정의 타당성을 높이려 하고 있다. 이 검정 기준에는 교과용도서의 질 관리를 위해 종전에 비해 교수-학습 기준을 강화하고, 외적 체제 기준과 교사용 지도서 기준을 신설하였다.

셋째, 기초조사와 본심사의 2단계 검정과정을 두어 교과용 도서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특히 기초조사에서는 교과서 내용의 사실 오류 여부, 교육과정 반영여부,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의 적절성 여부, 삽화·사진, 지면구성 및 편집 체제, 표현·표기, 사용한 어휘의 수 등을 면밀하게 조사하여 교과서의 합격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넷째, 자격을 갖춘 교과서는 모두 합격시킨다는 입장에서 합격 종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절대 평가제를 도입하여 검정을 행함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8) 조난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교과용 도서 연구 개발」 『교과서 연구』 제34호, 2000년 6월, 83-85쪽.

이상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교과서 검정체제는 시중에 유통되는 교과서 중에서 양질의 교과서를 선택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합목적성과 공정성 그리고 효율성의 원칙을 세워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교과서 검정의 구체적 방법과 절차로서 단계적 검정, 전문기관에 의한 검정기준의 개발, 기초조사와 본 심사의 2단계 검정, 절대평가를 설정하고 있다.

나. 우리나라 현행 교과서 검정체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우리나라 학교교육에서 교과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런 만큼 교과서의 개발, 발행, 공급 및 채택과 질 관리를 위한 교과서 정책은 중요하다. 이 중에서 교과서 개발 및 발행과 관련한 검정제도는 교과서의 질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되는 중요한 장치의 하나이다. 질 높고 적절한 교과서가 학습자에게 공급되어 교육 본래의 취지와 목적이 달성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교육적 배려와 정책적 고려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행 우리나라의 교과서 검정체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너무나 기술적인 측면에 치중해 있다는 점과 교과서 편찬 및 검정이 교육과정과 밀접히 연관되어 중앙정부가 매우 세부적인 부분까지 관여하고 있는 현실 등으로 인하여 중층화 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본다. 다음에서는 그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첫째, 교과서검정을 단계적·연차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교육과정의 개정에 맞추어 전 교과목을 일시에 그리고 단기간 내에 시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와 검증을 하기 어려운 고질적인 문제점이 있다. 일본에서 교육과정의 개정과 관계없이 각 교과서별로 4년을 주기로 상시적인 교과서 검정 조직과 인력을 설치하여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점이 크다. 특히 글로벌 지식기반 사회의 진전에 따라 학문과 기술의 발전이 급격히 전개되고 문화의 트렌드가 급변하는 현실을 생각할 때, 교과서를 교육과정에 연동하여 개정할 것이 아니라 3-5년의 주기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개정하여 검정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렇게 되면 교과서 검정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교과서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판사와 필자들에게 교과서의 편찬과 함께 개정을 준비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전의 경험을 효과적으로 피드백 하여 교과서 개발에 임할 수 있도록 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현재 우리나라의 교과서 검증 방향이 ‘이미 만들어진 교과서 중에서 양질의 교과서를 어떻게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가’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교과서를 만들기 전에 우리나라의 특수한 교육적 문제에 대해 어떠한 의식적 대응이나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앞서도 지적하였지만 현재 우리사회에서는 국민간의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헌법정신을 강조하여 국민을 통합하기 위한 의식적 노력이 교육과정 개발이나 검정기준의 개발 시에 경주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참고로 미국의 교과서 인정 기준에는 ‘법률에 위배된 과당, 종파, 교의, 선전의 배제’ 조항과 ‘사회 과목에 미국 독립선언문, 미국 헌법의 내용 포함’이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과서 검정기준에는 그러한 배려가 발견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본 발표문의 《부록》 1에 제시되어 있는 ‘근현대사’ 교과서의 검정 기준을 보아도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나 법률에 위배된 과당 등에 대한 배제 등의 기준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사나 사회에 헌법전문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한편, 대한민국이 현대사를 통하여 이룩한 성과와 남겨놓은 과제, 그리고 가까운 미래의 전망에 대하여 공통인식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교과서 검정과정에서 발견된 문제나 장점들이 교육과정의 개정이나 다음의 교과서 개발에 피드백될 수 있도록 제안제도를 명문화하는 것도 고려해 볼직 하다.

셋째, 중앙정부가 교육과정 개발 및 교과서 검정의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지나치게 관여하여 교과서의 체제나 내용 그리고 구성 방식까지도 획일화 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점은 교육에 중앙정부가 깊숙이 관여해온 우리나라의 전통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앞으로 국가의 관여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 문제의 개선은 현재 영미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법을 참고할 만하다고 본다. 영국과 미국은 교과서의 자유발행 또는 인정제를 채택하고 있다.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고시하지만 커다란 방향만을 제시할 뿐이다. 즉 투입이나 과정에 대해서는 최대한 학교 및 교사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다. 그러나 산출, 즉 교육의 성과에 대해서는 국가가 엄격히 관여하여 질을 관리하고 학교를 비롯한 각급 교육기관의 책

무를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교육과정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거나, 그것도 모자라 국사관련 과목에서 ‘내용전개 준거안’을 마련하여 세부 내용요소까지도 한정하는 일을 재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교과서 ‘집필상의 유의점’을 통하여 교과서의 조직, 구성, 판형, 색도, 쪽수에 관한 사항까지 규제하는 관행의 철폐를 고려하여야 한다. 대신에 국가차원에서 평가를 통해 관리하고 확인해야 할 성취표준을 설정하고, 타당성 있고 신뢰도 높은 교육평가를 시행하는 일에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교과서 검정을 어떠한 기관이 어떠한 절차를 통해 수행하는가에 대한 법률적 규정이 없이 임의적으로 행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즉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는 교과서 검정업무의 담당 기관이나 조직의 업무 분담에 대하여, 또 교과서 검정업무를 전담하는 상설조직이나 인원에 대하여 어떠한 규정도 설정되어 있지 않다⁹⁾. 현재는 교육부가 ‘교과용도서 심의회’를 구성하여 교과서 검정기준과 심의위원들을 위촉하고,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이 검정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가 구성하는 ‘교과용도서 심의회’도, 이들이 위촉하는 ‘검정심의회위원’들도 그 지위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일시적으로 구성되어 책임성과 계속성이 결여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검정 심의회위원들이 교과서가 개발된 이후 구성되기 때문에 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우수한 연구자나 교과전문가들이 제외

9) 2002년에는 국회에서 교육부 장관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사이에 교과서 검정 업무에 대한 책임공방이 벌어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도중에 사퇴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검정심의위원과 교과서 필자들 사이에 공개적으로 토론할 경우 우려되는 결과가 예상되기도 한다.

또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도 교과서 검정업무가 있는 동안에만 임시적으로 교과서 검정을 위한 인원이 배치되고 연구도 행해질 뿐이다. 그리하여 교육과정평가원 기관 조직에는 “교육과정·교과서 연구본부”가 형식적으로 있으나, 평상시의 업무에는 교과서검정과 관련한 내용이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¹⁰⁾. 즉 교과서 검정과 관련하여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여 교과서의 질을 체계적으로 개선해가는 주체가 조직 및 제도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초·중등교육법’ 제29조(교과용도서의 사용)를 개정하여 ‘교과서심의위원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해두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법령에 기초하여 ‘교과용도서심의회’를 ‘교과서심의위원회’로 확대하고, 이를 교육부 산하 상설 독립기구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과서심의위원회’에는 교육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산업계와 문화계의 인사를 비롯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학

10) 2005년 12월 말 현재, 교육과정평가원의 조직 및 업무 분장과 관련하여 교육과정·교과서 연구본부가 있으나(《부록》 2 참조), 그 업무내용을 보면 다음에서 보는 것처럼 교과서 관련 내용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 교과서 관련 연구 등은 교과서 검정이 있는 경우, 위탁을 받았을 때에만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교육과정·교과서연구본부의 업무

- 교육과정 연구개발과 장기발전 방안 연구
-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후속 지원 대책 연구
- 통일대비 교육과정 연구
- 교육과정 국제비교 연구
- 유아·영재교육 연구 및 자료 개발
- 교육과정에 관한 교육·연수
- 기타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부모 등이 참여하여 시민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그 산하에 보다 전문성을 갖는 ‘교과서검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교과서 검정 합격 여부의 심사를 담당하도록 한다.

또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검정 실무를 담당한다는 사실을 명기하여, 검정 실무를 담당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상설·독립기구화 된 ‘교과서심의위원회’의 지휘와 감독 하에 ‘교과서검정심의위원회’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내부의 상설 조직이 검정판정과 검정 실무 및 연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이로써 교과서 관련 업무의 담당기관과 책임한계가 명확히 되고, 교과서 업무가 축적적·발전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현행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조 및 제27조(11)에는 교과서 내용의 수정 및 개편과 관련하여, 그 주체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으로 되어 있으며 권한 범위와 한계도 설정되어 있지 않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검정도서나 인정도서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수정을 명할 수 있으며, 국정도서에 대해서는 임의적으로 개편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즉 정부나 교육부 장관의 정치적 신조나 의도가 개입할 소지를 차단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정 출판사에 대하여 유·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

-
- 11) 제26조 (수정)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과용도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정도서의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고, 검정도서의 경우에는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게 수정을 명할 수 있다.
- ②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도서의 인정을 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인정도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인정도서의 저작자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③교과용도서를 편찬하거나 발행하는 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어문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27조 (개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국정도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개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정 및 개편의 주체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아니라 독립상설기구인 ‘교과서심의위원회’로 할 필요가 있으며, 교과서 검정 시 출판사 혹은 필자 측에서 검정의 결과에 대해 변론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¹²⁾ 또한 국정 도서의 개편에 대해서도 일정한 절차와 방법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여섯째, 업무의 효율성이 강조되는 한편 교과서 검정 인력과 기간 등에 대한 기준 등이 전혀 없이 검정실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임의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교과서 검정업무가 충실하고 치밀하게 추진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즉 교과서 검정실무 기관에 검정예산을 일정하게 지급하면서, 그 운영에 대하여도 임의적으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구조적으로 교과서 검정업무의 효율성 및 경제성이 우선적으로 추구될 소지를 열어주고 있다.

요컨대 이점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으로 검정 실무기관이 예산을 필요이상으로 아껴 교과서 검정업무의 인력을 과소하게 구성하고 너무 짧은 단기간을 책정하여 검정업무가 소홀하게 진행되게 할 가능성이 크다. 참고로 2000년 2월에 행해진 중학교 2학년용 교과용 도서 검정 일정 및 교과별 위원수와 심의일수를 나타낸 다음의 【표 2】를 살펴보면 실제로 계획단계와 실제 단계에 검정 위원수와 기간이 대폭 축소된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12) 일본의 경우 교과서 집필자 혹은 출판사 측은 심의위원의 수정 혹은 삭제 지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표 2】 중2 교과별 위원수 및 심의일수(본 검정)

| 과 목 | 대상 교과서 | | 기초조사 | | 본검사 | | | 기초조사 총기간(안) | | 1차,2차심사 총기간(안) | |
|----------|-----------|-----|----------|--------------------------|----------|--------|-----------------------|----------------|---------|-------------------|---------|
| | 책수 | 쪽수 | 연구 위원 | 기간 | 검정 위원 | 간 사 | 기간 | 교과서 | 지도 서 | 교과서 | 지도 서 |
| 사회 2 | 10 | 180 | 7 | ³ 12.16-18 | 7 | 1 | ⁴ 1.4-7 | 5 | 4 | 9 | 9 |
| 수학 | 8-가 | 16 | 7 | ⁵ 12.16-20 | 8 | 1 | ⁵ 1.4-8 | | | | |
| | 8-나 | 16 | 7 | ⁵ 12.16-20 | 8 | | ⁵ 1.4-8 | | | | |
| 과학 2 | 9 | 250 | 6 | ⁵ 12.16-20 | 9 | 1 | ⁵ 1.4-8 | | | | |
| 기술·가정 2 | 12 | 200 | 6 | ⁵ 12.16-20 | 8 | 1 | ⁵ 1.4-8 | | | | |
| 체육 2 | 11 | 150 | 8 | ³ 12.16-18 | 9 | 1 | ⁴ 1.4-7 | | | | |
| 음악 2 | 9 | 70 | 7 | ³ 12.16-18 | 7 | 1 | ⁴ 1.4-7 | | | | |
| 미술 2 | 7 | 60 | 7 | ³ 12.16-18 | 7 | 1 | ⁴ 1.4-7 | | | | |
| 중학영어 2 | 15 | 250 | 12 | ⁵ 12.16-20 | 14 | 1 | ⁵ 1.4-8 | | | | |
| 한문 2 | 11 | 110 | 8 | ⁵ 12.16-20 | 8 | 1 | ⁴ 1.4-7 | | | | |
| 편집디자인 | - | - | 5 | ⁵ 12.16-20 | - | - | | | | | |
| 표현·표기 | - | - | 20 | ⁵ 12.16-20 | - | - | | | | | |
| 어휘 검색 | 영어 | - | 2 | ⁵ 12.16-20 | - | - | | | | | |
| | 한문 | - | 2 | ³ 12.16-18 | - | - | | | | | |
| 총계 | 120 | - | 104 | - | 85 | 9 | | | | | |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개선 방안으로 제시한 정기적 검정체제의 수립을 전제로 하면서 각 교과별로 교과의 성격과 예상되는 검정 물량에 대응하여 적절한 기본 상근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일시적 보조 인력과 예산을 집행하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제도라고 하더라도 적절

한 시행체제를 마련하지 못하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Ⅲ. 교과서 채택 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향

우리나라의 교과서 채택은 비교적 단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1종 교과서는 채택의 여지가 없으며, 2종 교과서는 검정에 합격한 교과서들 가운데서 학교별로 채택한다. 즉, 2종 교과서는 시·시도별로 장소를 선정하여 검정에 합격한 교과서의 전시회를 개최하고, 교사 등이 교과서 내용 등을 검토하여 학교 단위로 채택하도록 되어 있다.

다음의 【표 3】을 보면 교과서의 채택은 교사들의 협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교과서 채택의 방법

| | 중학교 | 고등학교 | 전체 |
|--------------------|------------|------------|------------|
| 담당 교사들의 협의에 의해 | 167(73.6%) | 212(82.5%) | 379(78.3%) |
| 교장이나 교감의 권고·지시에 따라 | 25(11.0%) | 26(10.1%) | 51(10.5%) |
| 상급기관의 권유·권고에 따라 | 21(9.3%) | 7(2.7%) | 28(5.8%) |
| 기타 | 14(6.2%) | 12(4.7%) | 26(5.6%) |
| 전체 | 227(100%) | 257(100%) | 484(100%) |

[출전 : 한국교육개발원 『교과서와 교과서 정책』 1986년, p.94]

그리고 교장이나 교감 및 상급기관이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학부모나 지역사회 인사 등이 교과서의 채택에 관여할 수 있는 소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앞서 지적한 1977년의 교과서 파동도 일어났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교사들이 교과서 채택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로서는 ‘교과서의 내용’이 중·고 모두 압도적으로 80%를 상회하고, 다음으로는 ‘과거의 사용 경험’과 ‘저자의 학문적 권위’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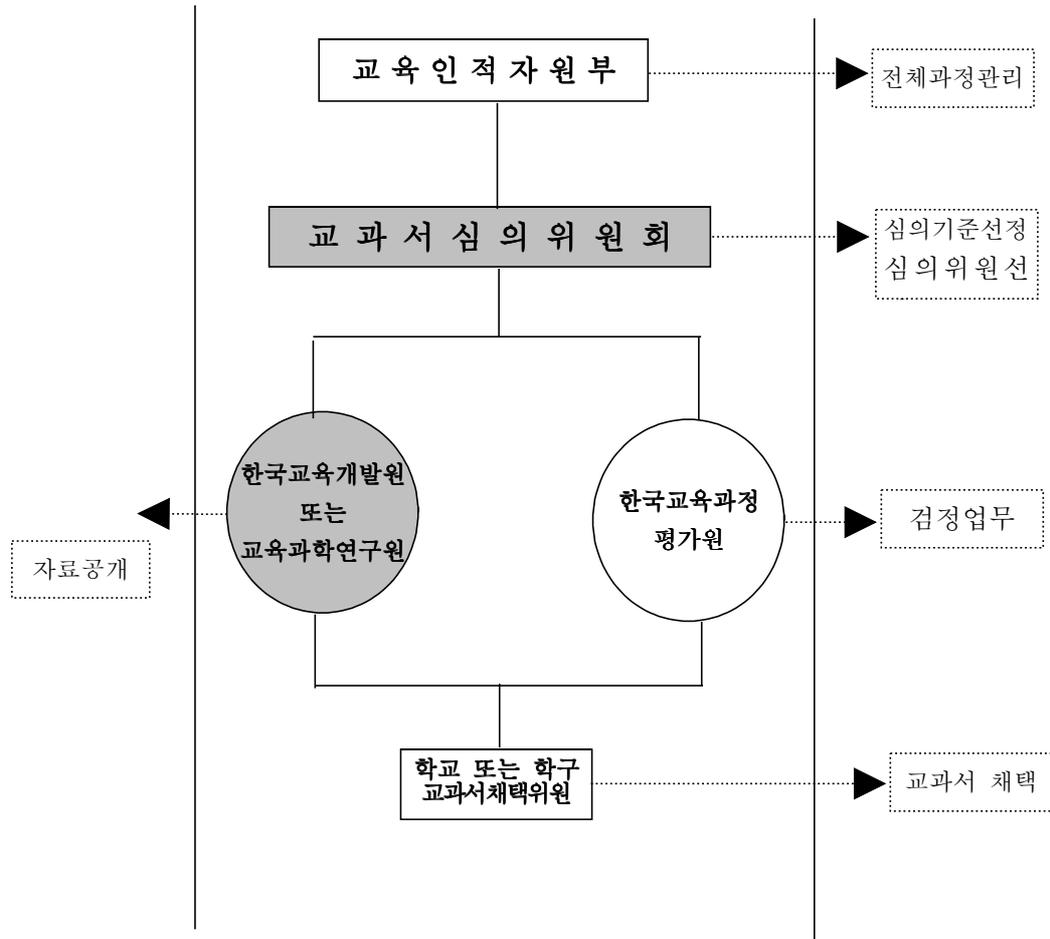
이상을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의 교과서 채택은 교사가 중심이 되어 교과서의 내용을 보고 선택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교과서 채택상의 문제점으로는 교과서의 또 다른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소외되고 교사 혹은 학교 관계자들만이 교과서 채택에 관여한다는 점이다. 또한 교육의 최종적인 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산업계와 문화계 및 지역사회 인사들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채널이 전혀 없다고 하는 점이다. 그리고 교육내용에 대한 검토가 개별 교사 차원에서 단 시간 내에 행해지기 때문에 충실한 파악을 한 후에 선택하기가 어려운 문제점도 지적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공립학교는 학교별 채택이 아니며 시정촌(市町村) 교육위원회별로 교과서 채택지구협의회를 조직하여 채택하고 있다. 이때 도도부현(都道府縣) 교육위원회는 전문적 지식을 가진 교장 및 교원, 교육위원회 관계자, 학식경험자로 구성되는 ‘교과용 도서 선정 심의회’를 설치하여, 각 교과서 마다 조사원을 위촉하여 조사·연구 결과를 선정 자료로 작성하도록 하여 채택권자에게 송부하여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점을 참고하여 공인된 기관이 중심이 되고, 각계각층을 포괄하여 교과서별 내용을 비교·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별 혹은 학구별로 교장, 교사, 학부모, 지역 내 학식자 등이 참가하여 ‘교과서채택위원회’를 구성하여 채택하

도록 하는 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공인된 기관으로서는 한국교육개발원이나 시·도별로 설립되어 있는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주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시도별로 설립되어 있는 교육과학연구원이 주관하면 지역별 특성이 교과서 비교·분석에 반영될 수 있어 다양한 교과서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과 같이 ‘교과서채택위원회’로 하여금 한국교육개발원 혹은 시도별 교육과학연구원에서 비교분석한 내용과 교과서 채택을 위한 기준을 참고하여 일정한 절차를 마련하여 교과서 채택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면 학교별로 교사만의 협의에 의해 교과서를 채택하는 방법보다 학생이나 학부모 및 지역사회인사가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정보에 입각하여 공정하게 교과서를 채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하의 [그림 2]와 같이 될 것이다.



[그림 2] 교과용 도서 검정 및 채택 조직도

IV. 맺음말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정부 수립과 함께 교육에 있어서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전통을 가졌다. 이러한 전통을 배경으로 교육의 급격한 양적 성장과 일정 정도의 질적 발전도 꾀할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대교육사는 전체적으로 보면 성공한 역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만큼 과거의 전통을 무조건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적 전환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인습을 그대로 인정해서도 안 된다. 정확한 현실 진단을 통해 문제를 객관화·명확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육은 모든 것과 상호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점진적이고 일관되며 지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는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관계를 보다 유연하게 생각하고, 교과서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관여를 줄이며, 교과서 관련 기관의 업무와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현재의 검정체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교과서의 채택과 관련해서는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에 대한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시도하여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선택주체들에게 공정한 판단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학부모와 지역사회인사도 교과서 채택 논의의 참가하는 방향에서 개선안을 그려보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속적으로 요청되는 것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하에 교과서의 질을 개선하고 다양화해 갈 수 있는 교과서 개발 체제를 구축해가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교육부 『교육비전 2002 - 새학교 문화 창조』 1998, 보도자료.
- 교육부 『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 관련 법규집』 2000년.
- 김정호 “교실 개혁을 위한 교과용 도서의 개선 방향” 『교과용 도서의 새로운 모형 연구』, 1998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 토론자료집.
- 김정호 “교과서 자유 발행제의 전제 조건” 『교과서 연구』 제34호, 2000년 6월.
- 김정호 외 『교과서 모형 개발 연구』 1998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대한민국정부 『사람, 지식, 그리고 도약.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2001년.
- 이명희 「제7차 교육과정기 교과서 체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2002년, 역사학대회발표 자료집.
- 조난심 외 『초등학교 교과서의 검정제 도입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1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조난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교과용 도서 연구 개발” 『교과서 연구』 제34호, 2000년 6월.
- 한국교과서연구원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2종 교과용 도서 검정 체제개선 연구』 1999년.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2종 교과용 도서검정 편람. 2000년.
- 한국교육개발원 『교과서 정책과 내용 구성 방식 국제비교 연구』 1995년,
- 한국교육개발원 『교과서와 교과서 정책』 1986년
- 허강 외 『한국 편수사 연구(I)』 2000년, 한국교과서연구재단.

【부록 1】

근현대사 교과서 검정기준

| 심사 영역 | 심사 관점 | 배점 | 평점 | 비고 |
|----------------|---|----|----|----|
| I. 교육과정의 준수 | 1. 한국근현대사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격, 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 등을 충실히 반영하였는가. | | | |
| II. 내용 선정 및 조직 | 2. 한국근현대사 학습 목표를 구현할 수 있고, 또 21세기 민족사의 전개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세를 기를 수 있도록, 학생의 수준에 적절한 내용을 선정하였는가. | | | |
| | 3.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활동과 탐구활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내용을 조직하였는가. | | | |
| | 4. 한국근현대사 학습 내용의 특성에 맞도록 단원을 구성하였으며, 단원간의 균형을 적절히 유지하고 있는가. | | | |
| | 5. 본문 내용의 이해를 높이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각 자료와 읽기 자료를 알맞게 제시하였는가. | | | |
| | 6. 사진, 삽화, 지도, 연표 등은 본문과 연계되어 구성되었으며, 인용 출처가 명확하고, 적절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는가. | | | |
| | 7. 한국근현대사의 중요한 주제가 심도 있게 다루어지고, 세계사와의 관련성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 있는가. | | | |
| | 8. 시간 배당 기준에 알맞은 학습 분량을 선정하여 구성하였는가. | | | |
| | 9. 내용의 오류나 편향적인 이론을 담고 있지는 않은가. | | | |
| | 10. 특정 정당, 지역, 인물, 성, 상품 등을 부당하게 비방, 왜곡, 옹호, 우대하는 내용이 있는가. | | | |
| | 11. 범교과 학습(민주시민 교육, 인성 교육, 환경 교육, 경제 교육, 에너지 교육, 근로정신함양 교육, 소비자 교육, 통일 교육, 한국문화 정체성 교육, 국제 이해 교육, 해양 교육, 정보화 교육, 양성 평등 교육 등) 내용이 관련 단원에 적절히 반영되었는가. | | | |

| 심사 영역 | 심사 관점 | 배점 | 평점 | 비고 |
|---------------|--|----|----|----|
| III. 교수 학습 방법 | 12. 한국근현대사의 교육 목표를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였는가. | | | |
| | 13. 한국근현대사 교수·학습 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의 수집, 분석, 활용 방법이 적절히 제시되었는가. | | | |
| | 14. 한국근현대사 교육의 목표-내용-방법과 일치하는 평가 방법과 과제를 제시하였는가. | | | |
| IV. 표현·표기 | 15.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준수하고, 지명·인명·용어 등은 편수 자료 및 관련 자료에 의거하여 표기되었는가. | | | |
| V. 편집 및 외형 체제 | 16. 편집 디자인이 참신하고, 지면을 효과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가. | | | |
| | 17. 삽화, 지도, 연표, 사진 등이 선명하고,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는가. | | | |
| | 18. 판형, 쪽수, 색도 등 외형 체제는 집필상의 유의점에 제시된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가. | | | |
| VI. 독창성 | 19. 참신한 내용을 선정하여 창의적으로 구성하였는가. | | | |
| | 20. 교수·학습 과정과 활동 등을 독창적으로 구성하였는가. | | | |

【부록 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조직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조직 및 부서소개입니다.

각 부서를 클릭하시면 부서가 맡은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부서별 소개란에는 부서 구성원과 E-mail 및 연락처를 볼 수 있습니다.



교과서 왜곡문제에 관한 국민 대토론회 자료집 토론문

- 교과서는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 / 117
서태열(고려대 교수)
- 왜곡된 교과서로 왜곡되는 우리 학교교육 / 125
최미숙(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서울대표)
- 문경호(대전외고 교사)
- 한국 국사교과서의 반성과 과제 / 143
정영순(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색간지

**교과서는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

서 태 열(고려대 교수)

교과서는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

서태열(고려대 교수)

우리나라 학교교육에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이고 독점적이면서도 권위의 중심적인 지위를 누려온 것이 교과서이다. 국가수준의 시험을 치르고서도 평가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시된 “교과서 범위 안에서 출제하였다”는 말 한마디가 어떤 근거보다도 중요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것은 교과서가 교육활동의 전개과정에서 가장 구체적인 매개체이자 중심적 도구이기 때문이겠지만, 우리의 교과서관이 그 자체로서 권위적인 것이고 하나의 바이블로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과서가 교과에 대한 종합사전의 역할을 함으로써 해당 교과 내용의 표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우선적으로 해온 탓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 권위주의시대를 마감하면서 나타난 교육자유화의 바람을 타고 새롭게 등장한 교과서관, 교과서검증체계, 교과서활용방법에서 새로운 문제점들과 혼란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교과서를 중심으로 보면,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사회적 진단과 처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동시에 드러난다.

실제로 그동안 학습과 관련된 그동안의 많은 이론이나 처방들이 지향하는 의미와 의의를 받아 학습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교과서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었고, 우리의 학교교육에서 교과서의 역할과 내용이 처방적, 기능적, 탄력적이라기보다 사전적, 획일적, 권위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교육환경들이 한꺼번에 개혁되고 변화를 맞이한 것이 7차 교육과정인데, 이 변화에 대응할 논리의 개발이나 교과서관련 정책의 개발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교과서가 집필되는 교과목의 내적논리와 외적논리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이 교과서가 개발되고 검증되는 경험을 하였었다.

이 과정에서 생겨난 교과서에 대한 논의는 교육환경의 변화 속에서 교과서 내용의 축소, 학습중심의 교과서, 수준별교육과정이 반영된 교과서를 지향하는 관점이 반영되는 것이 중요한 논점으로 교육계에서 다루어졌지만, 여전히 교과서관(교과서의 교육적 역할), 교과서와 교사의 관계, 교과서 내용에서 외적 논리(교육이념, 신념, 국가적 요구, 사회적 이념적 트렌드 등)의 반영방법에 있어서 많은 혼란을 증폭시킨 것도 사실이다. 그러면서도 다원주의 사회의 가치관에 따라 교과서의 다양성을 추구하려는 경향 속에서 교육에 대한 관점이 가지는 가치적 갈등과 혼란이 생겨나게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나 성급하게 이념적인 변동이나 편향성을 반영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다.

즉 특정한 교과목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하나의 바이블을 만드는데 익숙한 교과서관에서 벗어나, 특정한 교수

및 학습과 관련한 이론과 처방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학습 자료를 개발하고 그 한 부분으로서 교과서가 자리잡도록 하는 노력들이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다루어짐으로써, 이러한 교과서의 내용과 형식을 규정하는 내적인 학문적 논리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교육적 이념과 신념의 문제가 충분한 검토 없이, 충분한 여과 없이 얼마든지 교육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교과서 관련 정책과 체제 속에서 열린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다양성을 추구하는 속에서 특정한 교육이념과 국가 및 사회에 대한 이데올로기가 개인,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의 검토나 협의 없이도 교육환경 속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

교과서와 관련된 교육적 실행에서 이처럼 교육환경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교사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 어떤 환경에서 국가교육 과정이 아무리 만들어져도 교육적 실행과 실천의 중심체는 결국 교사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교사이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많은 교사들이 너무나 맹목적으로 교과서를 믿고 그대로 사용하는 문제점이 여전히 다른 방식으로 지속되고 있다. 교사는 자신의 교육관과 사회적·국가적 요구, 학생의 요구를 균형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줄 아는 교육과정의 재해석자이며 재구성자이어야 하며, 교과서와 다양한 교육적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주체이어야 한다는 사실이 부정되기도 한다.

교과서에서 다룰 내용이 어느 체계로 설명할 것인가에 따라 세계인식의 창이 달라지는 것도 사실이고 이러한 교과서를 사용할 교사가 어떤 교육적 신념을 가지는 지에 따라 학생들의 세계관은 달라지는 것도 사실이다. 다시 부연하면, 교과서에 어떤 지식체계를 제시하는

가에 따라 학습자의 세계에 대한 인식이 결정되며, 학습의 안내자인 교사는 세계인식의 창을 올바르게 형성하도록 학생들을 안내를 하게 된다.

교과서의 본래의 기능을 살리고, 교육이 교육답기 위해서는 교과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본질적 역할을 해야 한다.

첫째, 학습자의 관심과 체계적 지식의 획득을 균형적으로 고려하는 교과서가 되어야 한다.

둘째, 진정한 학생중심, 학습자 중심의 교육 그리고 학생의 개성과 적성을 키우는 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이념화된 하나의 가치의 주입보다 학습자 스스로의 다양하고도 직접적인 참여와 체험이 중요시되어야 한다.

셋째, 교과서는 학습자의 주체적인 해석과 분석, 판단의 과정을 중시하는 즉 학습자가 주체적이고 다양한 해석이나 접근, 안목 등을 제시하고 이를 비판, 검토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동일한 교육이라도 교육적 개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학습자의 관심과 이념, 성향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교육은 교과서 차원에서까지도 이러한 교육적 개입을 세심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교과서와 교육 외적논리의 성급한 주입보다는 학습자의 주체적인 관심이나 구조와 관련을 맺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다섯째, 교과서는 학습자의 “앞”에 이르는 과정을 처방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최종적인 형태의 숙달해야 하거나 주입되어야 할 지식이나 가치를 전달하려는 것보다, 학습자 스스로 다양한 관점으로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즉 부연하면, 교과서는 “외부에서 주어진 형식논리를 따라 객관화된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해가는 과정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학습의 과정과 절차를 계획하여 실행할 수 있는 과정을 중시하는 가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본질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여섯째, 바람직한 교과서는 성전이 되거나 어떤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고와 가치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인고 끝에 스스로 가치에 대한 믿음과 신념을 획득하도록 학생들에게 열린 교과서가 되어야 한다.

색간지

**왜곡된 교과서로 왜곡되는
우리 학교교육**

최 미 숙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서울대표]

왜곡된 교과서로 왜곡되는 우리 학교교육

최미숙(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서울대표)

저는 세 아들을 둔 학부모로 15년 가까이 학교교육에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왔습니다. 학부모로서 저도 아이와 함께 성장했다고도 할 수 있을 만큼 학부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아이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는 초등학교 학부모회에서, 중학교 때는 어머니회에서, 나아가 학교운영위원회 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학부모 활동은 교장선생님이나 교사들의 지도를 받아 봉사활동을 한다는 입장이 강했습니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학부모 활동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교육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시점에서는 더욱 그 중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게 된 것이 학사모(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활동입니다. 학사모 활동을 하면서 우리 교육이 가진 총체적인 문제점들을 깨닫게 되었고 그 해결방법을 구체적으로 시급히 찾아야한다는 절박함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학부모는 자녀 양육의 무한책임을 진 교육주체로서 국가와 정부를 믿고 아이의 교육을 공교육에 맡겨왔습니다. 그 공교육의 중심에는 학교도 있고 선생님도 있겠지만 교과서 역시 한축을 담당한다고 생각합니

다. 그런데,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과서에 이렇게 많은 편향성이 있다는 데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나아가 과연 학교에 아이를 맡겨도 되는 건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 학부모활동을 시작 할 때는 봉사한다는 입장에서, 내 아이를 교육해주시는 선생님과 학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시작했지만 학부모활동을 통해서본 학교의 모습은 고마움과 안타까움이 교차하는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한해두해가 지나고 학부모들의 의식도 높아지면서 갖가지 학교의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그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과정에 학부모가 하나의 중추적인 주체로 거듭나 이제는 뒤에서 따라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정책의 최종수용자로서, 그 감시자의 역할과 견제와 대안의 모색까지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현재 학교에는 공식적으로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구들이 있는데 그 중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어머니회와는 달리 아주 많은 권한과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과서를 결정하는 문제도 그 중 하나입니다. 학교마다 매년 학기 초에 교과서 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서 추천한 교과서 샘플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 승인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얼마나 형식적인지, 교과서에 대한 비교분석자료를 사전에 주거나 설명해주는 절차 없이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는 당일에 샘플을 내놓고 결정하게 합니다. 결국 교사들이 중점적으로 추천하는 교과서를 승인하는 형식적인 과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여태까지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국가를 믿고 공교육에 아이를 맡겨놓은 입장에서 교사들도 국가고시를 통해

뽕힌 이들이고 교과서 역시 정부에서 검인한 교과서들인데 어떤 교과서가 되든 무슨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아이들은 물론, 학부모들로부터도 불멘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수행평가다’ 해서 가뜩이나 선생님 개개인의 재량권이 한층 강화된 상태인데, 선생님의 성향에 따라, 혹은 교사가 소속된 교원단체에 따라 아이들을 가르치는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계기수업이라 해서 선거 때는 총선수업을, 효순, 미선이 촛불시위가 한창인 때는 미군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APEC 정상회의에서는 부시 대통령에 대한 노골적인 욕설이 담긴 내용을 수업하는 등 선생님 재량 수업의 내용이 문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국가보안법에 관한 수업에서는 ‘안기부나 이근안을 빌려준다면 한 달 안에 한나라당과 조선일보(조선일보) 간첩단 사건을 만들 수 있다’는 개사곡을 만들어 부르게도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연구수업이라 해서 학교마다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공개적으로 시행하던 그런 수업 말고, 선생님의 재량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이 현재는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시위에 참여하고 그 감상문을 숙제로 내주는 교사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자율성 재고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일지 모르지만 한 학교 안에서 반마다 가르치는 내용이 달라진다는 면에서 현재의 학교수업 제도를 다시 한 번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의 근원에는 합의되지 않은 수업진행이 가능하다는데 있습니다. 수업지도안이 없어진 지 이미 수년이 지난 지금,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내용에 대해 학부모는 물론, 학교장도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합의되지도 않고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성장기 가치관 형성과정에 있는 아이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주입식으로 전달할 수도 있다는 것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교사들이 전교조, 교총 등 소속된 교원단체에 따라 확연히 다른 성향을 드러내면서 ‘교단갈등’ 현상이 학교 분위기를 암울하게 만들거나 정부정책에 집단행동으로 맞서는 교사들의 모습은 장래 우리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런 교사들의 모습이 아이들에게 여과 없이 전달될 뿐만 아니라 수업 내용에 따라서는 교사나 교과서를 통해서 편향된 시각이 아이들의 가치관으로 정립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학부모이면서 내 아이가 보는 교과서를 너무도 모르고 있었구나! 하는 반성과 함께 도대체 우리나라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런 교과서를 승인해준 정부는 생각이 있기는 한 것인지, 이런 정부의 공교육에 우리 아이들을 믿고 맡겨놔도 되는 것인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교육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극명하게 사상적 대립의 양상으로 대두된 것은 전교조 합법화 이후라고 보여집니다. 교원단체인 전교조가 그 역할이나 힘의 행사에 있어서 사회적 과장을 넘어 정책결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모습은 우리나라가 과연 사회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능력을 갖고 있는지도 의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과 교원단체 사이에 있었던 대립과 갈등의 양상은 단 한 번도 명쾌한 해결책이나 합의점을 도출한 적 없이 소모전을 거듭하다 파행으로 끝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객관적이고 중심 있는 교육을 실행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문제는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지만 학교현장에서 느끼는 부분을 분석해놓은 이계성님(참고자료, 전직교사이며 금천고등학교 운영위원장)의 자료를 보면 더욱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역사교과서의 경우, 나라의 정체성에 관한 역사의식은 앞으로 아이들이 선택하고 살아 나가야할 미래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해주는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정책연구원의 김광동 박사님이 금성출판사의 역사교과서중 근현대사 부분에 대한 분석 자료를 보면(참고자료), 미국과 북한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좌 편향적으로 표현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레드컴플렉스를 자극하는 내용도 문제겠지만 역사적 사실을 기술하는데 있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시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학술지도 아닌 교과서에서는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지적은 <교과서포럼>에서 주최한 4차 심포지엄 자료 “중·고등학교 교과서 내 한국 근대사 서술의 허구와 진실”에서 최문영 교수가 지적한 근현대사 서술의 편향성, 약탈과 수탈로 일관해 근대경제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분석한 김재호 교수의 분석내용을 보면서도 더욱 심각한 우려를 품게 되었습니다. 2차 심포지엄 자료 “중·고등학교 경제 관련 교과서 이대로 좋은가”에서는 중앙대 김승욱 교수가 지적한 경제이론교육의 문제, 서울대 이영훈 교수가 분석한 한국경제를 그린 교과서의 문제점 분석 등은 자본주의사회인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정립에 있어 현재의 교과서들이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 학부모들이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 반성하면서 우리 정부와 전문가들이 학부모나 사회를 대상으로 홍보하거나 교육하는 데는 너무 인색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교수님들이 분석한 자료들이 다음 교과서 개정 때는 분명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학부모 선정위원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정책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책도 아닌 교과서가 왜곡된다는 것은 교과서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 교과서로 배우는 아이들이 더 이상 늘지 않도록 정책적인 배려와 전문가들의 강력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와 홍보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는 오늘 이 자리를 제공한 한나라당에서도 실천해 주셨으면 하는 것으로 이런 왜곡 교과서들이 일선학교에 널리 알려져 채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토론자료 역시 일선학교의 학부모 임원들에게 만이라도 전달돼 학부모들이 우리 교과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그 선정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해 왜곡교과서가 채택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1】 나라정책연구원의 김광동 박사님의 교과서 분석자료(한국 현대사에 대한 금성사 교과서 서술 분석)

▶ 정통성 및 주도세력

| | | |
|--|---|--------------------------------------|
| <p>- (건국세력):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민중의 폭넓은 지지를 얻었다. 일제하의 지주와 기업가들을 중심으로 한 일단의 인사들은 한국민주당(한민당)을 만들었으며... (p.255) 미군은 자신들이 실시하</p> | <p>- 북한은 '민주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일제의 식민 지배를 청산하고 사회체제를 바꾸는 일련의 정책을 시행하였다. 친일파를 숙청하는 한편... 토지개혁을 실시... (p.265)</p> | <p>-수정주의 :B Cumings -내재적 접근법</p> |
|--|---|--------------------------------------|

| | | |
|--|---|--|
| <p>는 군정만이 유일한 정부임을 거듭 확인하였다. 그러면서 군정정에 필요한 한국인 관리는 주로 한국민주당 계열의 인물로 채웠다(p.256)</p> <p>- (분단책임): 미국과 소련은.. 자신들의 세계정책에 들어맞는 적합한 정부를 세우고자 하였다. 남북의 정치지도자들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도 하였다. 이승만은... 곧 바로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하였다. 남한에서 정부가 세워진다면 이는 북한 정부의 수립으로 이어질 것이 확실하였다.(p.261)</p> <p>남한에서 단독 정부 수립의 움직임이 표면화되자, 북한도 정부수립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였다.(p.265)</p> <p>- (정부수립) : 통일정부의 건설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과 여러 정치세력들의 반대 속에...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세우기 위한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남북협상 참가세력과 많은 중도계 인사들이 참가를 거부... 통일 민족 국가수립이 실패...(p.264)</p> <p>- (정통성) : 민족을 배신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누리던 친일파를 단죄하는 일은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 이승만 정부는 친일파의 처벌에 소극적... 노골적인 방해에 나섰다.. 민족정신에 토대를 둔 새로운 나라의 출발은 수포로 돌아갔다... 친일파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파오는 우리 현대사를 옥죄는 굴레가 되었다.(p.266)</p> | <p>- (사회개혁) : 토지개혁의 결과 북한에서는 지주가 사라졌으며 빈농이 줄어들고 중농이 농민의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p.322)</p> <p>- 북한군은 점령지역에서 토지개혁이나 노동법령의 개정과 같은 북한식 개혁을 하면서..(p.272)</p> <p>- 북한이 말하는 우리식 사회주의란 당면한 문제를 스스로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자는 것이었다. 북한은 이를 뒷받침해주는 근본적인 힘으로 '조선민족 제일주의'를 들고 있다.</p> <p>우리는 오랜 세월동안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창조적 활동으로 훌륭한 문화유산을 남기고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온 뛰어난 민족이라는 것이다.(p.306)</p> | <p>: 송두율 : 선전 논리적 : 역사기술 - 반 대한민국 - 민주주의</p> |
|--|---|--|

▶ 미국 및 소련의 역할

| | | |
|--|--|--|
| <p>-연합군이 승리한 결과로 광복이 이루어진 것은 우리 민족 스스로 원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데 장애가 되었다.(p.253)</p> <p>-일본국기가 내려졌다. 그러나 일장기대신 올라간 것은 태극기가 아니었다... 그 자리에 펴려있는 것은 이제 성조기였다. 광복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역사적 순간은 자주독립을 위한 시련의 출발점이기도 하였다.(p.256)</p> <p>- 노동자들은... 생산 활동을 계속하였다. 농민들은... 일본인이 소유한 토지를 접수하여 공동으로 경작... 그렇지만 농민과 노동자의 이와 같은 활동은 이후 미 군정의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p.254) 미 군정은 한국인들이 만든 모든 행정기구와 그 활동을 받아들이지 않았다.(p.255)</p> <p>- 살기 어렵기는 마찬가지이고: 미군정에 대한 여론은 갈수록 나빠졌다. 미 군정은 남한의 경제를 살리는데 적극적인 않았다.(p.321) 미 군정은 토지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았다.(p.322) 한국사회의 현실과 민족교육이념을 무시한 채 양적 확대에만 치중한 미군정의 교육정책은 한국인들과 커다란 충돌을 빚기도 하였다.(p.344)</p> <p>-(한국지원) 미국은... 자국의 잉여 농산물을 처리하여 만성화된 농업 공황을 타개할 수 있었다... 자국 내에서 농업공황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대충자금(代充資金)은... 절반 가까이 미국의 무기를 사들이는데 소비되었다. 이에 따라 경제뿐만 아니라 무기체계도 미국에 종속되어 갔다.(p.324) 미국의 경제원조는 한국이 공산주의를 막아내는 방어기지 역학을 하도록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p.325)</p> | <p>- 소련군은 북한 주민들이 세운 건국준비위원회를 대부분 인정하였다(p.256)</p> <p>초기 북한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소련의 지원을 받았으며 사상적으로도 소련의 노선을 따랐다(302)</p> <p>- 미군과 소련군의 포고령을 통해 두 나라 군대의 주둔정책을 알아보자(p.257)</p> <p>- (6·25전쟁) 전쟁의 전주곡: 38도서 곳곳에서 국군과 북한군 간에 크고 작은 충돌이 철새없이 일어나고 있었다.</p> <p>이러한 전투는 곧이어 벌어질 본격적인 전쟁의 전주곡이었다... 남북정부는 서로 상대방이 불법도발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대포, 비행기까지 동원된 대규모 전투가 벌어지기도 했다.(p.268)</p> <p>북한군의 전면적인 공격으로 전쟁은 시작되었다(p.270)</p> <p>민간인 학살도 곳곳에서 일어났다... 보도연맹원에 대한 대대적인 처형... 경남 거창과 충북 영동의 노근리 등... 후퇴하는 북한군도 대전 등지에서 많은 주민을 죽였다.(p.272)</p> | <p>-모택동과 비동맹주의</p> <p>- 반미주의의 초점</p> <p>- 1)해방·독립 2)한국전쟁 3)전후복구와 경제성장에서 미국역할 부정</p> <p>-‘작은 전쟁’론 :사실상의 전쟁도발</p> <p>- 소련에 의한 공산주의화와 약탈, 중국참전 등에 대한 기술 없음</p> <p>- 한국 및 미국군의 잘못에 초점 =>북의 납치, 학살제외</p> |
|--|--|--|

▶ 이승만/박정희(전두환) VS 김일성/ 김정일

| | | |
|---|--|---|
| <p>- 이승만정부는 장기집권을 모색하였다. 이로 인해 독재정치와 부정부패를 불러일으켰고...(p.276) 이승만정부는 북한과 대화나 타협을 시도 하지 않은 채 철저한 반공·반북정책을 고수하였다.p.(308)</p> <p>-(이승만) 일부 소장파 국회의원들도 주한미군의 철수, 친일파처벌, 토지개혁 등을 주장하면서 이승만정부에 압력을 가하였다. 이승만정부는 국회의원의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반공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p.264)</p> <p>- 이승만 정부의 독재화: 이승만 정부는 집권 후 부패척결이나 친일파 청산 등 민주의 요구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권력을 강화하는데 힘을 쏟았다. 이로 인해 민심은 점차 등을 돌렸다. 이승만이 권력을 독점... 경찰과 군대 폭력단을 동원하여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였다.(p.276)</p> <p>- 이승만 정부는... 정치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의 잉여농산물을 필요이상으로 들여왔다.(p.325)</p> <p>-(박정희) 박정희는 3선개헌과 10월 유신을 통해 장기집권과 권력의 강화를 꾀하였으나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거센 반발을 받았다.(p.276)</p> <p>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일부 군인들은 정변을 일으켜... 정책을 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군사정변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으로 호지부지 끝나거나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군사정부는 반대세력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였다. 비판적인 언론도 없애고 언론인을 구속하였다.(p.285)</p> | <p>-(조봉암) 조봉암은 대통령 선거에서 유호득표의 30%를 차지하는 돌풍을 일으켜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대변하였다... 위기를 느낀 이승만정권은 반대세력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여 정권을 유지...(p.277) 조봉암과 진보당 등 일부 진보세력이 평화통일론을 주장하였으나 정부의 탄압으로 확산되지 못하였다(p.308)</p> <p>-(김일성) 1인 독재체제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자... 사회주의 국가건설이라는 이념적 명분을 가지고 있었으며,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던 김일성측은 세력분포의 우위를 토대로.. 자신의 권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었다.(p.300)</p> <p>-사회주의헌법은 김일성의 유일지도체계를 명확히 하였다... 국가주석제를 도입하고 김일성을 주석에 추대하였다. 주석에 절대적인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수령의 유일한 영도체계를 확립..(p.303)</p> <p>-(김정일) 김정일은 조선노동당에서 조직, 문화예술, 홍보 관계의 중요한 직책을 맡아 수행하였다... 주체사상이 유일사상이 됨에 따라 이를 가장 올바르게 해석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사람이 수령의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고 선전되었다. 김정일이 주체사상에 대한 해석하고실천에 옮길 수 있는 사람이 수령의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고 선전되었다. 김정일이 주체사상에 대한 해석을 독점함으로써 자연히 후계자의 자리를 굳혀나갔다.(p.304)</p> | <p>-정통성:건준-조봉암-민주화정부</p> <p>-한국:일관된 부정,비판</p> <p>북한:합리화, 이해하는 식</p> <p>-이승만, 박정희 부정적 측면만 부각</p> <p>-공산주의의 Black Hole과 맞서야했던 상황 부정: 성공한 나라의 지도자임을 부정</p> <p>-김일성, 김정일 미화: 세습체계 합리화</p> |
|---|--|---|

▶ 이승만/박정희(전두환) VS 김일성/ 김정일(계속)

| | | |
|---|---|---|
| <p>-박정희정부는... 경제발전의 지속과 국가안정을 구실로... 장기집권의 길을 열었다.(p.286)</p> <p>-헌법위에 존재하는 대통령: 위기에 처한 박정희정부는... 정치적 안정이 중요하다는 구실을 내세워 강압적인 통치에 나섰다... 초법적인 비상대권을 부여하였다... 영구 집권이 가능하였다...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이름아래... 독재체제로 나아간 것이 유신체제였다.(p.288)</p> <p>-나라 안팎에서 궁지에 몰린 박정희정부는 민주화운동과 야당에 대한 탄압을 강화함으로써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박정희의 죽음으로 박정희 1인에 의해 유지되던 강압적인 유신체제는 막을 내렸다.(p.289)</p> | <p>-김일성이 사망하자 자연히 북한의 권력은 김정일에게 돌아왔다. 김정일은 이후 3년동안 공식적인 직책을 이어받지 않은 채 생전의 김일성교시에 따라 정치를 하는 이른바 유훈통치(遺訓統治)를 시행하였다(p.308)</p> | <p>- 성공한 나라(한국)와 실패한 체제(북한)에 대한 주요지도자 평가가 정반대로 기술</p> |
|---|---|---|

▶ 경제와 사회문화

| | | |
|---|--|---|
| <p>-귀속재산에 대한 불하도 본격화되었다... 기업체를 불하받는 것은 커다란 특혜조치였다. 이러한 특혜조치를 바탕으로 1950년대 한국사회에서는 점차 독점자본이 성장하였다.(p.324) 일부 기업에 원조물자가 집중적으로 배당되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이들 기업은 손쉽게 자본을 축적하였다. 그리고 정부 권력과 유착된 독점체제로 성장해갔다.(p.325)</p> | <p>- (북한경제) 힘겨운 국방비 지출로 경제에 투자할 자본의 확보가 어려웠고 에너지와 사회간접시설의 부족은 경제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되었다.</p> <p>북한은 이러한 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군대를 건설형장에 투입하고 남한에 대해 지속적으로 군비축소를 제의하였다.(p.305)</p> | <p>-한국경제의 출발: 독점자본-특혜-재벌</p> <p>-북한경제실패=남한 과도한 군비문제(군비축소)</p> |
|---|--|---|

▶ 경제와 사회문화(계속)

| | | |
|---|--|---|
| <p>-경제성장, 한강변의 기적을 이루었으나: 외형적으로 눈부시게 발전하였다... 그러나 더욱 외국에 의존... 외국자본을 더 많이 도입해야만 했다... 외채도 급속하게 늘어났다. 1960년대말 위기를 맞이하였다(p.327) 한국 경제는 자본과 기술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종속되어 갔다... 한국경제는 다시 어려움에 빠졌다... 이 위기는:... 3저 호황으로 벗어날 수 있었다.(p.328)</p> | <p>-(핵 개발) 막대한 군사비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북한은 1990년대 전반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국제적 의심을 받았다... 북한은 미국에게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 것을 거듭 제안하였다. 평화협정으로 국제사회로부터 군사적 안전을 보장 받으려는 것이었다.(p.314)</p> <p>-(천리마운동) 대중의 정신력에 호소하여</p> | <p>-마.일 종속경제로 부각</p> <p>-한민족사상 최대변화인 비약적 한국경제의 성장에 대한 기술, 평가(거의) 없음</p> |
|---|--|---|

| | | |
|--|--|---|
| <p>- 재벌의 성장: 재벌기업은 한동안 빠른 경제발전과 수출에 기여하기도 하였으나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은 요인으로 지적되기도 하였다.</p> <p>-문어발식 경영: 재벌하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은 문어발 일 것이다... 실제로 대기업의 계열 기업 수는 수십개에 달하며 문어발은 8개에 지나지 않으니 문어발이라는 표현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셈이다... 특혜조치에 힘입은 것... 일가친척에 의한 족벌 경영... 세계 경제 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것.(p.329)</p> <p>-(새마을운동) 길으로는 민간의 자발적인 운동이었으나 실제로는 정부가 주도하였다 그리고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이나 대가를 치르는 것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정신 자세를 강조하였다... 농촌의 길모양을 바꾸는데 치중하였다.(p.334) 새마을 운동은 박정희정부가 대중의 지지를 기반으로 장기 집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평가...(p.334)</p> | <p>노동력을 최대한 동원하는 천리마운동을 통해 경제건설을 추진... 대중의 열정을 끌어내기 위해 시행된 천리마운동은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 전반에 걸쳐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커다란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p.301)</p> | <p>-반기업주의 반대 대기업(재벌)주의=감정적 격분화 (문어, 유래없다)</p> <p>-핵무기 개발 합리화</p> <p>-세계가 배우는 새마을운동과 실패한 천리마운동은 반대로 기술</p> |
|--|--|---|

▶ 각종 사건에 대한 기술

| | |
|--|--|
| <p>-(10.1 폭동) 미군정의 사회, 경제정책에 반발하는 철도 노동자들의 총파업이 일어났다. 총파업은 대구 등 여러 곳의 민중봉기로 이어졌다. 10월 1일 대구에서 시작된 봉기는...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봉기는 경찰이나 우익 청년단체들에 의해 무력으로 진압되었다.(p.260)</p> <p>-(4.3 폭동) 단독정부 수립에 가장 격렬한 반대투쟁이 일어난 곳은 제주도였다. 단독정부수립 반대와 미군의 즉시 철수 등을 주장하는 제주도의 공산주의자와 일부 주민들은 무장봉기하여...(p.262)</p> <p>-(통일노력) 1980년대 접어들어 민족민주운동이 진척됨에 따라 통일에 대한 논의나 통일운동은 학생층을 비롯하여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어 갔다.(p.312) 정부가 입북한 사람들을 엄히 처벌하고 민간차원의 남북교류를 저지함으로써... 진보당의 통일정책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사상이념·제도를 초월한... 민족 자주성의 실현...(p.313)</p> | |
|--|--|

| |
|--|
| <p>- (노동·시민운동) 교사들은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을 내세우며,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을 결성하였다.(p.337) 민중예술활동으로 확대... 한국민중예술인연합회를 만들어 민족예술의 발전을 위한 활발한... (p.346) 시민운동단체들은 특정한 사회적 쟁점이 있을 때는 연합체를 구성하여 연대활동을 벌이고 있다.(p.339)</p> <p>- (학문·문화·교육) 안재홍, 손진태. 마르크스사학자와 신민족주의 사학자들이 대부분 월북하거나 납북됨으로써 역사학의 다양성은 줄어들었다... 1980년대 중반에는 역사학의 과학화와 실천성을 강조하는 민중사학이 나타나 기층민의 관점에서 한국사에 대한 재정리를 시도하기도 하였다.</p> <p><=> -음악 예술인들은 새 민주 조선건설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김일성, p.347)</p> <p>-민중을 위해 관공과 싸우고... 민중들만의 세상을 만들어낸 불가사리는... 외적의 침략에 대항하는 평양성 주민들의 투쟁을 그린 작품...(p.347)</p> <p>- 사진과 그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복과 대한민국 수립> 단독 인물사진: 모택동(p.250) 여운형(p.255) 김규식(p.255) • 이승만, 박정희 단독사진 없음(김구와 함께/ 비판하기 위한 우표) • 여순순천 폭동: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죄명으로 잡혀온 여수여고 학생들 • Internet Site <p>: 끝나지 않은 역사 4/3/ 제주4·3연구소/ 5·18 가상체험관/ 5·18기념재단</p> |
|--|

【참고 2】 금천고등학교 운영위원장, 전직교사인 이계성님이 발췌한 자료

| |
|--|
| <p>▶ 전교조의 의식화 교육 실태</p> <p>(1) 전교조의 “중등용 국보법 수업지도안은</p> <p>첫째, 상황극인 「나는 감옥 갈 뻔 했네」라는 주제 : 국보법에 위반되는상황을 기획하고, 각색하고, 연출하도록 , 교사가 지도방향은 「나는 그래도 국보법을 어길 수밖에 없을 거야」라는 결론 둘째, 교사가 학생에게 낭송하도록 돼 있는 시 자료</p> <p>“그런 법(국가보안법을 가르침) 따위 헌신짝으로 던져버리자. / 너는 고무하라 나는 찬양하리니 / 너는 잠입 하라 나는 탈출하리니 / 오, 우리들의 평화로운 이적행위여”(하략)</p> <p>셋째, 노래 부르기 활동에서 중 하나인 「몽상」이라는 곡의 가사</p> <p>『국보법과 안기부(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이근안(과 거 고문경찰)을 빌려준다면 한 달 안에 한나라당과 조선일보(조선일보) 간첩단 사건을 만 들 수 있다.』</p> <p>넷째, 학생들에게 교육시킬 퀴즈자료로 제시된 내용에는</p> <p>『1960, 1970년대 농민들이 술을 마시고 말 한마디 잘못해 국보법위반으로 끌려간 뒤 그 술의 이름을 따서 XXX보안법이라고 한다. 이 XXX의 술 이름은 무엇입니까?』</p> <p>답은 막걸리 보안법.</p> |
|--|

- (2) 전교조가 제주도4·3사건과 관련해 '질판 부착자료' 그림 자료
 별거벗은 남자의 등을 인두로 '치이익~' 지지는 장면,
 교수형에 처하는 장면 등이 표현돼 그림 밑에는 '미군정은 인민위원회를 눈엣가시처럼 여겼다'
 '제주도4·3사건 이후 남한 단독 선거가 한반도 분단의 원인이 됐다'는 등의 설명을 달도록 지침이 첨부돼 있다. 와홀리 인민위원회'라고 쓰인 현판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 주 민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전교조의 '제주 4.3사건 계기수업 자료'중 일부다.
- (3) APEC 정상회의 바로알기 동영상 자료
 조롱의 대상은 부시 미국 대통령 동영상 속에 부시 대통령의 입에서는 펍(fuck-망할자식들)이라는 욕설이 계속 튀어 나온다.
 "오우 여러분, 펍킹 반갑습니다... / 제 이 펍 같은 얼굴 보니 좀 살맛나죠(야유)...
 아무튼 테러하는 XX들 다 때려잡아야 돼. 걸리면 다 죽어. 펍..."
 "야 무현이 니 디질래? 이 펍하고 나빌레라. / 야 그 좃불 든 새끼들 다 펍킹 테러리스트 아니야?
 까라면 까지 뭐 말이 많어. 펍킹"
 "(오사마 빈 라덴에게) 이거 테러하는 새끼들 다 때려잡아야 돼"
 "(미국 뉴올리언스의 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지역에서) 사람 많이 죽은 거 이거 테러 아니야"
 부시 대통령의 캐릭터가 "펍킹(fucking망할자식)"
 비속어가 난무
- (4) 외환위기와 관련해 "1997년 금융자본가 몇몇 놈들이 아시아에서 지들 이 짱박은 돈을 짹 빼 버리니까 달러가 한 푼도 없는 기라. 그래서 IMF가 돈 빌려 준다고 구조조정하라고 하더니 이제는 아예 금융자 유화라며 맥아지 잡고 덩따 쥐고 흔들어 버립디다"라며 노 대통령의 목소리를 흉내 냈다.
 비속어- 생떼, 지들 나라, 짱박아 놓은 돈, 맥아지(모가지)
- (5) 교원평가 시범 실시 막으려고 연가 투쟁 위협, 교육감실을 점거하고, 시범학교 신청 학교에 찾아가 협박하여 많은 학교가 신청을 포기 // 교원평가 시범학교 48개교에 협박전화 내용
 "×××교장 떠나라" / "제命대로 살고 싶지 않나" / '위대한 결단을 내렸으니 기자회견을 하라'
 '퇴출시켜야 할 인간' 등의 협박전화 / 학교가 전교조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냐?'
 △△△, 너 딱 걸렸어', / '민주 절차도 모르는 ○○○ 교장 물러가라'는 글이 교내에 붙어
- (6) 2006년 수능 한국 근현대사 문제
 2005년 11월 23일에 치러진 대학입시에서까지 정치색이 짙은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 사회 13번에 박정희 대통령과 김대중 후보의 제7대 대통령 유세장면을 만화로 소개했다. 박대통령은 경제성장을 위해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하다. 한번 더 신임해 주면 후계자를 육성하겠다. 고 했고, 김후보는 생산성 증대와 분배 평형을 이뤄 대중경제를 실현하겠다고, 정권교체를 이루지 못하면 영구집권체제가 출현할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설명한 뒤에 선거후 박대통령이 취한 조치에 해당하는 것을 물었다. 답지에는 3선 개헌, 유신 헌법공포, 내각책임제 개헌, 국가재건최고회의 설치, 7년 대통령단임제 실시 등이 제시되고 답은 유신 헌법이다. 박대통령을 비하하기 위해 출제된 문제다. 노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치적 문제가 전교조교사에 의해 출제되었다.

15번 한일회담 관련 문제에도 '1965년 한일협정은 한국의 근대화와 경제발전을 위한 중자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으나 실리에 급한 나머지 과거청산의 명분과 기회를 희생 시켰다'는 지문을 제시하고 적절하지 않은 설명을 고르라고 했다. 한일회담의 잘못 되었음을 은연중에 부각시켜 박대통령의 실정을 공격하는 문제였다. 이밖에도 19번 문제는 모스크바 3상 협의 문제를 제시하고 좌익 주장 이 옳았다는 식으로 좌익을 두둔하는 문제도 출제 되었다. 심지어 대학 입시까지 좌파들이 이용하고 있다. 북한보다 남한 이 먼저 무너진다는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16번 문제는 '사회주의 체제 붕괴에 대한 북한의 대응'을 묻는 질문으로서 "사회주의 붕괴로 충격을 받은 북한 지도부는 그 같은 몰락을 피하기 위하여..."다음에 들어갈 내용을 고르는 것이다. 5개의 지문은 아래와 같다.

- ① 천리마 운동과 3대 혁명 운동을 시작하였다. // ② 사회주의 헌법을 제정하고 주석제를 신설하였다.
- ③ 농업 협동화 정책을 통해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강화하였다.
- ④북한 체제의 우수성을 선전하고 제한적으로 경제 개방을 추진하였다.
- ⑤김일성 개인숭배에 비판적인 연안파와 소련파를 숙청하여 권력을 강화하였다.

이 문제는 정답을 ④번으로 하고 있어, 마치 북한 체제의 우수성과 지도부의 경제 개방으로 북한 체제가 유지돼 왔다는 식의 판단을 유도하고 있다.

15번 문제는 '65년 韓日 협정'에 대해 적절치 않은 내용을 다음과 같은 5개의 지문 중 고르도록 하고 있다.

- ① 한반도에서 냉전이 완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 ② 한국은 식민 통치에 대한 사죄를 받아내지 못했다.
- ③ 한국은 약 3억 달러의 자금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 ④ 한국 경제의 대일 의존도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 ⑤ 회담 내용이 알려지면서 전국적인 반대 시위가 발생하였다.

이 문제의 정답은 ①번이다. 65년 한일 협정을 통해 얻어 낸 5억불이 한국 근대화의 시드 머니가 됐다는 사실(事實) 대신 한국 경제의 대일 의존도를 증가시키는 등 부정적 효과만 있었다는 식의 평가를 내리고 있다.

▶ **전교의 불실한 수업**

학원 보내야하는 학부모 : 연간 20조 사교육 비, 조기유학 유학이민 으로 20조 기러기 아바 가정 파탄 고3담임이 8시 출근해서 3시에 운동하러 나가 학부모 협박 직영급식-교장기 꺾기-학부모 협박

▶ **모의고사 학력평가 자율학습 보충 수업 반대**

학력저하 : 학생들 사교육비 20조 + 조기유학 교육이민 어학연수비 20조

▶ **전교조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학부모 학생들 평가를 받는 일**

학생들 비위 맞추기 위해 외모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점을 이 용해서 두발자유화 교복자유화 흡연학생 처벌 반대. 공부가 싫은 학생들 비위 맞추기 위해 공부보다 특기적성교육이 참교육이라 대학까지 평준화 주장하며 서울대 없애기 모의고사폐지 등 자신들이 학생들에게 부실하게 교육 시킨다 는 사실이 드러날 일은 모조리 비교육적이라며 못하게 방해

자기들의 태만이 드러날 학급일지 출근부 없애기 투쟁 등 학 교장을 무력화 하는 데만 힘쓸 원로교사에 24시간 자기들 20, 전교조가 말하는 민족은 좌익세력을 지칭 전교조에는 인권교육을 실천 한다는 참교육 강령이 있는데 북한 인권문제는 가르치지 않고 있다.

▶ **확산되는 전교조 공포증**

외국에서 온 교육전문가 국립중학교 시찰- 취재 안내를 맡은 연구원이나 학교장은 “교원평가제 같은 민감한 내용의 인터뷰를 한 것을 (전교조가) 알면 난리난다”며 말 그대로 바들바들 떨어 전교조가 때로 몰려와 학교를 쑥밭으로 만든 관학구 사립고교장-전교조의 힘이 청와대에서 나오기 때문에 대항해서 싸움 불가

교육감은 “국회의원도, 교육위원도 안 무섭다. ‘반대’만 하는 전교조만 없으면 일할 맛이 나겠다”고 하는가 하면, 한 중학교 여교사는 “(전교조를) 탈퇴하고 싶어도 동료 눈치 때문에 왕따 당할까 두려워 못하겠다”고 교육 현장에는 어느새 ‘전교조에 잘못 보이면 다친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전교조 공포증’이 깔려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조퇴투쟁으로 동참하려다 여론이 악화되자 막판에 취소한 적도 있다. 전전교조 위원장 이수호는 전교조와 민주노총을 오가며 위원장을 하고 있다. 이들이 노동자 집단인지 교사 집단인지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 **엄청난 재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 집단**

전교조는 우리나라 최강의 이익집단이고 최대의 노조, 평교사 5명중 1명이 전교조 조합원, 연간 쓰는 예산이 민주노총 50억, 한국노총 40억의 4-5배인 220억원, 전교조 본부와 16개 시도의 전임자만 107명으로 이들이 엄청난 자금력을 바탕으로 투쟁 방향과 이념개발에 몰두, 교장이나 교감이 학교 경영에서 작은 실수라도 하면 지역 전교조를 총동원하여 몇 달 몇 년을 학교에서 투쟁하여 쑥밭으로 만들어 전교조에 한번 걸리면 퇴직을 하거나 자살하는 길 밖에 없다는 것이 현직교장들의 공통 견해

▶ **전교조에 의해 한국이 개조 중**

지금 초중고 학생들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좋던 싫던 12년 동안 전교조의 이념교육의 세뇌를 받아야 한다. 이런 세뇌교육을 받은 60만 명의 학생들이 해마다 대학이나 사회로 쏟아져 나온다. 전교조가 대한민국 국민과 체제를 개조해 가고 있다. 전교조 문제는 교육과 교육계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 존립의 문제이고 국가 진로의 문제며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문제이기도 한다.

지금 누구도 전교조가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다. 그들에게는 학생 학부모 교육부는 안중에도 없다. 오직 이념만이 있을 뿐이다. 부소불휘의 권력으로 교원평가제가 헌 종이장이 되었고, 교육 다양화 선진화의 핵심사항인 자립형 사립고 설립도 특목고 설립 교육개방도 공염불이 되었다. 초등학교 기초학력 도 볼 수 없고, 평준화의 틀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교장 교감의 손발을 묶어 놓은 채 전교조의 입맛대로 교육이 요리되고 있다.

색간지

한국 국사교과서의 반성과 과제

정 영 순(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한국 국사교과서의 반성과 과제

정영순(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21세기 지구촌 시대,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전 세계는 화해와 협력을 지향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2001년도와 2005년도의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과동에 의한 한·중·일 간 외교적 마찰로 인해 동아시아의 평화와 협력이 무너지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는 광복 60주년을 맞이하면서 광복 이후 지금까지 한국인 내부에서 정리되지 못한 과거사 청산 문제로 한국 사회 내부가 보수와 진보 논쟁으로 해방 정국시기에 있었던 좌우익 갈등이 보다 심화되고 뜨거워지고 있다.

이러한 안팎의 사정은 우리의 내부를 좀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성찰할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시점에 오늘과 같은 중요한 세미나에서 한국의 국사교과서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고찰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교과서는 다음 세대들 인격 형성의 지침이다. 역사 교과서를 객관적으로 쓰는 것은 유럽 사람들이 백인 중심 세계사를 버려야 한다는 자기반성에서 출발하였다. 역사의 중립성은 유럽의 국가주의자들이 서로 애국적 역사를 쓰려는데 대한 반박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동양에서는 때때로 독재 권력자의 압력에 의하여 역사가 왜곡되

기도 하였다. 또한 관객이 가장 많은 역사책이 교과서이다. 동양권의 나라들에서는 교과서를 절대시하는 전통이 있어, 정사(正史)에 버금가는 책으로 인식하는 습성이 생겨났다. 특히 최근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과 중국이 고구려사를 중국의 변방사로 편입시키려는 시도 역시 그러한 일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때 한국에서의 역사교과서 서술에 대한 반성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성립 이래 민족분단의 상황 속에서 지난 60여 년 동안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룩하였다. 이는 1945년에서 1953년에 걸친 국가건설 기간의 노력에 의해 규정된 것들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 시기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의 각 측면에서 선택되고 확립된 것이 이후 대한민국의 변화와 발전의 토대가 되었고, 오늘날 북한과 구별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해방 후 대한민국의 역사교육은 다음의 특징이 있다. 첫째, 일제강점기의 교육을 상당히 불식시키고자 노력하였으나 그 영향은 아직도 많이 받고 있다. 둘째, 대한민국의 성립 이후 미국의 대 한국 교육정책의 영향이 매우 크다.

먼저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적 정신주의가 강조되면서 교과목에서는 한국어와 한국사교육이 가장 큰 시련을 겪었다. 한국은 일제의 식민지가 되면서부터 자국사 교육은 보통교육에서 거의 행해질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1945년까지 초등교육에서 한국사가 체계적으로 가르쳐지지 않았고, 취급되더라도 왜곡과 변조된 한국사가 교수되었다.

다음 미군정의 대한민국 교육정책(1945.8~1946.9)은 미국 당국에 의해 사전에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시행된 것이 아니라, 미 군정청이 한국인 교육전문가들을 등용하여 이들과 함께 교육정책을 진행시켰다. 미 군정청은 한국 교육의 재건을 위해서 가장 긴급한 일은 교사의 충원 및 재교육이었으며, 교재의 확보였다. 교사 중에서도 한글과 한국사를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그리하여 해방 직후 교사들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소양이 한글과 국사를 가르치는 능력이었고, 두 번째 요구되는 것은 민주적 교육을 할 수 있는 소양이었다.

당시 교육내용의 특징을 보면 한국의 정체성과 관련된 내용과 민주주의 이념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주제 설정은 새롭게 출발하는 국가의 국민의식 형성을 위한 배려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당시 미국과의 관계 등 대외 관계가 중요하였기 때문에 ‘나라 사이의 교제’가 강조되고 있었다. 이러한 내용 구성은 신 국가건설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이에 맞는 체계적인 교육내용을 구성하였다기보다는 당시의 정세판단을 기초로 한 실용적이고 실무적인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다음에는 교수요목기(1946.9-1953년)이다. 이 시기에는 사회적으로 이데올로기적 대립이 격심하게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교수요목은 이데올로기적 당파성을 배제하고, 일제하 식민지 교육의 불식과 보편적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편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역사교육의 또 다른 특징은 근대 국가의 교육에서 당연히 추구하는 국가정체성 교육을 보류하였다는 점이

다. 당시의 국사교과서는 반일민족의식을 보여주고 있으나, 곳곳에서 일제 식민사학자들에 의해 왜곡된 역사의식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일제에 의해 훼손된 민족적 자존심을 회복하고 자주적인 민족의식을 되찾고자 하는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고대사가 중시되고 외침을 극복한 민족역량이 강조되었다.

다음 시기는 민족주의 강화기이다. 즉 역사교육에서 민족주의가 가장 강화되었던 시기는 1963년 공포된 제2차 교육과정기였다. 당시 교육목표는 반공정신, 경제적 효율성, 국민정신, 실천적 교육 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1968년 <국민교육헌장>을 공포한 후, 이것은 모든 국민이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정신적 지표로 강조되었다. 이 헌장 내용에는 ‘역사’와 ‘민족’이라는 단어가 강조되었다. 그리고 교육 방침은 ‘국민교육헌장 정신의 구현’, 교육의 이념은 ‘국적 있는 교육’이었고, 역사교육은 이를 실행하는 데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였다. 특히 자신을 희생하여 외세에 저항한 역사적 사실은 나라를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을 희생할 수도 있다는 정신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기에 적합한 소재로 여겨졌다. 역사교육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하는 교훈은 ‘단결과 노력으로 줄기찬 분발이 계속되었던 시대에는 국가의 번성과 찬란한 민족문화의 개화를 보았으나, 분열과 상쟁이 거듭되었던 시대에는 국난을 자초하여 국권마저 유린당하는 치욕을 남겼던 것’을 깨닫는 것이었다.

제3차 교육과정에서는 ‘국적 있는 교육’이 교육의 전반적인 목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 교육과정의 두드러진 특색은 국가교육의 강화에 있었다. ‘민족’과 ‘국사’를 강조하는 당시 정부 역사교육의 방향은 ‘주체적 민족사관’을 강조하는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주체적 민

족사관은 주변 정세의 변화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우리 민족의 전통과 국가의 자주성을 뚝뚝이 지키며, 이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주체적 민족사관의 확립을 뜻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관의 목적은 ‘북한’의 남침 야욕을 저지하고, 조국 통일에 대비한 민족 주체세력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은 이후 1980년대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제4차 교육과정은 그 동안 인간 교육을 소홀히 했다는 측면이 반영되어 미래지향적인 정신과 인간 중심적인 성격을 반영한 것이었다.

한편 제6차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은 다양한 이수 과정과 교과목을 개설하고, 선택과목을 확대하여 교육내용의 획일성을 해소한다는 방침 하에 한국사 교육이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한국사 새 교육과정의 목표는 과정 개정의 중점을 반영하여, 다음의 4가지 측면을 강조하여 구성하였다. 첫째, 민주사회의 시민적 자질 함양을 목표로 강조하였다. 민주 사회의 바람직한 성원에게 요구되는 ‘역사의식’과 ‘비판적 사고력’, 그리고 ‘국가 사회의 발전에 참여하려는 태도’ 등을 강조하였다. 둘째, 세계화와 지역화의 시대적 요청을 반영하였다. 세계화의 요청에 부응하여 한국사와 세계사의 관련 학습을 강조하였고, 한국사에서의 지역화를 위해 향토사 학습을 강조하였다. 셋째, 역사학습의 과정(過程) 목표로 추구되어야 할 기능과 능력, 가치와 태도를 강조하였다.

현행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종전 교육과정 내용의 80%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단원별로 다루어지는 주제 수를 줄이도록 하였다. 한국의 교육과정은 제6차 교육과정기에서는 국사와 세계사로 나뉘었던 역사를 독립교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오직 국

사만은 독립의 교과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였다. 1997년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 중인 제7차 교육과정은 제6차와 달리 1학년에서 10학년(고등학교 1학년)까지를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고, 11~12학년은 선택중심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일원화시켰다.

그리하여 국사가 포함되어 있는 사회과도 1학년에서 10학년까지는 과목의 구분 없이 동일한 목표, 교수-학습방법, 평가방법을 갖는 단일 교육과정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10학년의 국사는 사회과 내에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8-9학년의 국사와 차별화시키기 위하여 고유한 체계를 갖고 있다. 그리고 11~12학년의 사회과는 일반선택 과목과 심화선택과목으로 나누었는데, 심화선택과목에는 현대사 중심의 한국 근·현대사와 세계사를 비롯해 한국지리, 세계지리, 법과 사회,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9개 과목을 두었다.

여기서 현행 국사교과서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10학년까지의 국사교과서가 근대이전시기까지만 다루고 있으며, 한국근현대사는 선택과목으로 되어 인문계학생들조차 11~12학년에서 선택을 하지 않으면,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배우지 않고 평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세계사 속에서의 한국사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국사와 세계사 교육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국사교과서는 제7차 교육과정의 역사교육의 중점사항에 맞추어 서술되고 있으며, 중점사항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學校級別 내용의 系列性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학생들의 국사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이기 위해 재미있는 교과서를 편찬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이다.

셋째,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역사적 자료의 활용능력과 탐구기능의 신장을 강조했다라는 점이다.

제7차 교육과정의 역사교육이 종전에 비해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역사학 본래의 특성을 살리려는 방향으로 개선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이에 대한 역사학계의 반응은 전체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먼저, 역사교육의 내용을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통제하는 현행 교과서의 국정제 및 검인정제를 2중 혹은 자유발행제로 개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교통과 정보망의 발달로 지구상의 모든 국가가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며 더불어 살 수 밖에 없는 국제화,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오히려 세계사 교육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세계사는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세계사 혹은 동아시아사의 보편성 속에서 한국사의 개별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나아가 각국의 역사와 문화를 서로 존중하며 전 세계의 평화공존을 도모하는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 세계사 교육은 한층 더 강화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21세기는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공동체사회라고 할 수 있는 지구촌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유네스코에서는 오랫동안 국제이해를 위

한 교육을 주관하여 많은 업적을 남겼다. 민족과 인종 문제를 뛰어넘는 도덕적 가치와 인간성의 회복에 역점을 두었고, 역사의 보편 가치에 치중하고자 하였다. 자국사를 세계사적 관점에서 객관화·상대화함으로써 민족사적 편견을 최소화하려는 운동을 벌였던 것이다.

역사의 본질은 개별성의 서술에 있고, 특수사·민족사는 보편사의 구체적 내용이고 이것은 보편사에 선행하여 등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기에 과장과 윤색되는 민족사를 극복하는 일은 역사교육에서 중요하면서도 어려움이 많다. 이런 점에서 국제화·세계화를 위한 한계성이 나타난다. 더군다나 역사의 상당 부분을 함께 공유한 인접 국가 간의 역사문제의 분쟁은 원만한 해결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각기 다른 정치 배경과 민족의 문제가 연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주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중·일간의 역사교과서 논쟁이 이를 잘 입증하고 있다. 오늘날에도 일본인 학자들은 한국의 역사교육에는 민족사의 성향이 너무 강하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하여 한국 측은 식민지 지배 하 한국사회가 가졌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변론한다.

한국의 근대사학은 일제의 식민지배에 반대하는 민족주의 사학으로부터 출발하였다. 따라서 한국식민지 민족주의는 강대국의 민족주의와는 다르다. 한국은 기존의 정치체제, 사회구조 및 전통문화가 모두 파괴당했기 때문에 안팎의 이중적 과제를 지니고 있었다. 안으로는 먼저 좌우의 갈등을 극복하고, 밖으로는 한·일 두 나라만이 아니라 인접국가 간의 역사서술과 그 교육이 앞으로 부정적 측면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긍정적 측면도 함께 노출시켜 보다 효과적

인 교육이 되도록 서로 노력해야 한다. 세계의 보편질서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역사교육에서 세계인의 보편가치를 과감히 수용하고 이를 내면화하여야 하며, 세계인과 더불어 사는 지혜를 알고 이를 함께 공유하여야 한다.